

東北亞地域에서의 多者間 安保協力體 形成展望과 對應策

1993. 9.

洪 圭 德 (國際研究室 責任研究員)

民族統一研究院

- 이 報告書는 民族統一研究院의 研究計劃에 依據한 自體 研究 報告임.
- 收錄된 內容은 統一問題研究 및 政策開發의 參考 資料로 提供되는 것으로서 發行處의 意見을 반드시 反映하는 것은 아님.

民族統一研究院 國際研究室

序 文

냉전종식으로 동북아 안보환경에도 구조적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한반도를 둘러싼 4강간 양자관계가 재정립되고 있으며, 동북아 안보의 위협요인으로 간주되던 남북한관계에서도 대화 재개로 긴장완화 기운이 조성되고 있다.

이에 따라 지역국간 군사대립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감소되고 있으나 안보환경 변화에 따른 不確實性 증대로 역내 국가들간 군비경쟁은 심화되고 있다. 특히, 북한의 핵무기 개발노력은 동북아 및 세계 안보에 위협요인으로 등장하고 있다.

북한의 핵무기 개발을 포함한 역내 국가들의 군비경쟁은 이를 통제할 장치의 부재로 지속되고 있다. 이에 따라 동북아지역 국들은 지역안보 위협에 대한 포괄적인 협상이 필요하다는 인식아래 多者間 安保協力體 구성을 모색하고 있다. 특히, 한국정부는 東北亞 多者間 安保協力體 구성을 당면외교 목표로 삼고 있는 바, 본 연구는 다자간 안보협력체 構成 可能性과 다자간 안보협력체 구성이 남북한관계에 미칠 영향을 檢討·分析하고, 우리의 대응책을 제시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본 연구가 1990년대 동북아질서 및 한반도 통일환경 변화를 전망하는데 도움이 되고 통일정책 입안에 기여할 수 있는 참고자료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1993. 9

民族統一研究院
國際研究室

要約

第 I 章 序 論

냉전종식 이후 새로운 세계질서가 모색되는 가운데 동북아에서도 多者間 安保協力體 구성 필요성에 관한 논의가 대두되고 있다. 현재 광역차원에서의 「아세안 지역포럼」(ASEAN Regional Forum) 결성 움직임에 참여하고 있는 한국은 미국과의 협의하에 동북아를 위주로 한 6개국간 다자간 안보대화 구성을 시도하고 있다.

따라서 본과제는 첫째, 한국정부가 동북아를 위주로 한 다자간 안보대화구성에 적극적인 자세를 갖게 된 정책변화의 배경을 설명하고 동북아에서 다자간 안보대화에 참여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期待效果가 무엇인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둘째, 協力安保의 개념과 목표를 검토하고 아·태지역의 안보현황과 협력안보에 대한 역내 및 역외 국가들의 입장을 분석하고자 한다. 셋째, 동북아라는 특수한 환경속에서 다자간 안보대화가 협력체 수준으로까지 발전가능한 것인지를 制約要因과 促進要因을 통해 관찰하고, 안보대화 추진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참가국의 범위문제, 의제문제, 제도화의 수준문제 등을 논의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다자간 안보협력체 구성이 남북한관계에 미칠 영향을 살펴보고 북한이 참여를 거부할 경우에 대한 대응책과 한국이 고려해야 할 사항들을 논의해 보고자 한다.

第Ⅱ章 東北亞 多者間 安保協力體 構想의 擡頭

1. 韓國의 安保思考 轉換

한국정부는 한·미동맹을 기본축으로 하는 안보정책을 견지하는 한편 지역국들의 군비경쟁과 북한의 핵개발 문제 등 동북아 안보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대응하고 미국의 동북아정책 변화 가능성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동북아를 중심으로 하는 다자간 안보협력체 구상에 적극성을 보이고 있다.

2. 多者間 安保協力에 대한 韓國의 期待

김영삼 정부 출범 이후 한국이 다자간 안보협력을 적극 추진하게 된 이유는 한반도 분단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북한의 개방을 유도하는데 있다. 또한, 한국은 다자간 안보협력을 통해 휴전협정의 평화협정 전환, 북한핵의 평화적 이용 등 남북간에 해결되기 어려운 현안문제들을 해결하려 하고 있다. 역내 안보 문제와 관련 한국은 다자간 안보대화를 통해서 중, 일 등 역내 국가들의 군비경쟁을 지양하여 지역 안정화를 이룰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3. 多者間 安保協力體의 類型과 東北亞에서의 實現 可能性

동북아 다자간협력이 기초하고 있는 「協力安保」(Cooperative

Security)나 「共通安保」(Common Security)의 개념은 동북아의 특수한 구조속에서는 생소한 단어이며 「유럽안보협력회의」(Conference on Security and Cooperation in Europe: CSCE)가 동북아에서 실현가능한 것인지 의문시되고 있다.

「협력안보」의 개념은 그 특징상 적을 가상하지 않으며 대화를 통한 분쟁의 사전 예방을 주요 목표로 하고 있다. 즉 기존의 집단안보나 집단자위동맹 등과 엄격히 구분되며 힘에 의존한 문제해결을 추구하지 않는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第Ⅲ章 安保協力에 대한 關聯國들의 立場

1. 아시아의 安保現況

냉전종식은 동북아 안보질서에 변화를 초래하고 있다. 역내 국가간 군사적 위협은 상대적으로 줄어들고 있으나, 역내 안보 질서 변화에 따른 不確實性의 증대로 군비경쟁은 심화되고 있다. 특히, 북한의 핵무기 개발을 포함한 역내 국가들의 군비경쟁 추세는 통제장치의 부재로 지속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아·태 및 동북아지역국들은 지역안보 위협에 대한 포괄적인 협상이 필요하다는 인식아래 다자간 안보협력체 구성을 모색하고 있다.

2. 域內 主要國들의 提案 및 立場

미국 클린턴행정부는 동북아 및 아·태지역에서 자국의 안보 역할을 저비용으로 유지하면서 영향력을 지속적으로 확보하고자 다자간 안보협력에 적극적인 관심을 표명하고 있다. 미국은 기존의 양자관계를 補完하는 차원에서 다자간 안보협력을 지원하고 있으며 캄보디아사태나 북한 핵문제 해결에서 경험했듯이 분쟁지역 문제의 해결에 다자간협력의 효용성을 인정하고 있다.

일본은 아·태지역에서의 다자간 안보기구 창설을 제안함으로써 자국의 국제적 역할증대에 대한 주변국들의 우려를 완화시키면서 정치·안보적인 발언권을 제도적으로 확보하려고 하고 있다.

러시아는 동북아지역에서 안보협력에 대해 가장 많은 제안을 해왔다. 러시아는 이러한 제안들을 통해 미국의 군사적 영향력 희석, 일본과 중국의 군사력 증대 견제, 한반도의 분쟁예방 및 핵을 비롯한 대량살상무기의 역내확산 방지를 추구함으로써 동북아로부터 안보위협을 제거하려는 의도를 갖고 있다.

중국은 과거 동북아 다자간 안보협력체 창설 주장을 중국포위전략의 일환으로 인식하여 반대해 왔다. 그러나 중국은 냉전 종식 이후 지역분쟁요인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다자간 안보협력체 창설 구상에 대해 점차 공감하는 입장이다. 그러나 인권문제나 자국의 정치에 대한 간섭은 철저하게 배제시키고자

노력하고 있다.

북한은 분단문제 등 역내 주요현안이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다자간 안보협력구상이 실효성을 발휘할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반대한다는 입장을 취하여 왔다. 그러나 최근 「IGCC 동북아협력회의」(이하 동북아협력회의)를 위한 준비회담에서 북한은 동북아지역의 군사적 대결을 방지하고 긴장해소를 위해 다자간 안보협력체 구성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표명하였다.

한국정부는 북한 핵문제를 포함한 한반도 안보문제의 안정적 관리와 긍정적인 통일환경 조성을 위한 주변국들의 협력 유도를 위해 다자간 안보대화를 활용하고자 하고 있다. 아울러 다자간 안보외교를 통해 한국의 국제적 역할 증대를 모색하고 있다.

3. 域外 關聯國들의 提案 및 立場

캐나다와 호주는 태평양 국가임을 자부하고 아·태지역 안보 문제에 관심을 표명하여 왔으며, 1990년부터 아·태지역 다자간 안보대화에 대한 구상을 제기하고 이를 위한 국제여론 형성에 앞장서 왔다.

최근 아세안은 미국의 안보역할 감소와 중, 일의 영향력 증대를 우려하여 아세안을 중심으로 하는 아·태지역 안보대화에 적극적 입장을 보이고 「아세안 지역안보포럼」(ASEAN Regional Forum)을 발전시키기로 합의하였다. 이와 같은 역외 국가들의

움직임은 동북아지역 다자간 안보대화 구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第Ⅳ章 東北亞 多者間 安保協力體 構成의 懸案 및 發展 展望

1. 制約要因 및 促進要因

동북아 다자간 안보협력체 구성에 대한 제약요인으로는 역내 국가간 수교상태 부재, 쌍무적 동맹관계의 약화에 대한 우려, 안보문제에 대한 다자간 협력 경험 부족 및 북한의 핵 위협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장애요인에도 불구하고 동북아에서는 미래지향적인 차원에서 안보협력을 필요로 하는 움직임들이 나타나고 있다. 미, 일, 러, 한국 등의 다자간 안보협력에 대한 필요성 인식, 북한의 NPT 탈퇴로 인한 한반도 문제의 국제화 추세 및 지역국간의 경제적 상호의존도 심화 등은 새로운 안보협력기구 구성을 촉진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미국이 이러한 구상에 적극성을 보이고 있는 점이 주목된다.

한국은 1993년 10월 미국 샌디에고에서 개최예정인 「동북아 협력회의」 본회의에 참석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남·북한·미·일·중·러 등 동북아 6개국간의 다자간 안보대화를 공식적으로 출범시키고자 희망하고 있다.

2. 主要 懸案

현재 동북아 6개국만의 대화체제를 가정할 때, 한반도를 포함한 동북아지역 문제에 관한 주요 이해당사국들만의 모임이라는 점에서 효과적일 수 있다. 그러나 과연 동북아 6개국만의 회의가 최선의 방법인지 연구해 보아야 하며, 특히 동북아안보협력 회의가 장기적으로 군비축소를 목표로 한다면 역외 관련국들의 참여도 고려해 보아야 할 것이다.

의제 문제에 있어서 비정치적인 대화를 개시함과 동시에 지역안전보장에 보다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북한 핵문제나 미사일문제 등 군비통제문제도 동시에 논의해야 바람직할 것이다. 그러나 대화자체를 시작하는 것이 중요한 현상황에서 참여국중 어느 한 국가라도 반대하는 의제를 다루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현재 동북아안보협력회의 창설을 추진하고 있는 한국과 미국은 대화를 습관화하고 정례화하는 방안, 기존제도를 활용하는 방안, 새로운 기구나 제도를 구성하는 방안 등 다각적인 방향에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신뢰구축 분위기를 조성한다는 점에서 정부간 대화 보다는 비정부간 접촉, 즉 학계나 기타 연구소 등을 중심으로 한 모임을 통해 신뢰구축의 실험과 과정을 통해 협력을 증진시키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다.

3. 發展 展望

안보대화를 추진하려는 현 상황에서 다자간 안보대화가 주요

이해가 결린 민감한 사항들을 다루는 진정한 의미의 안보협력 체로 급속히 발전하기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동북아 6 개국들이 대화 추진을 더 이상 반대하지 않는다는 점은 일단 고무적인 현상이며, 향후 다자간 안보협력에 대한 지역국들의 노력이 심화될 전망이다.

第 V 章 東北亞 安保協力體 構成과 南北韓關係

1. 安保協力體 構成이 南北韓關係에 미치는 影響

북한이 다자간대화 틀을 남북대화 회피 및 정치선전 수단으로 이용한다면 다자간 대화는 남북관계 개선에 도움이 되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동북아협력회의」를 통해 남북한이 지속적인 접촉을 갖고 비정치적, 비군사적 의제들을 지속적으로 다룰 수 있다면 신뢰구축에 도움이 될 것이다. 또한 남북한 양자간 대화 채널이 막힌 경우, 다자간 대화를 활용할 수 있는 대안을 갖는다는 점에서 남북관계의 경색방지에 도움이 될 것이다.

한국은 휴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시키는 문제에 있어서도 다자간 틀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남북간의 합의를 바탕으로 주변 4강이 다자간 대화의 틀속에서 평화체제를 보장할 수 있다면 다자간 협력이 남북한 평화체제구축에 공헌할 수 있을 것이다. 북한 역시 이러한 대화의 장을 통해 북·미수교나 북·일수교에 접근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는 점에서 다자간

대화 참여에 대한 매력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2. 北韓의 豫想態度 및 對應策

북한은 최근 샌디에고 「동북아협력회의」 준비회의에서 보여준 것처럼 향후 북·미간의 관계개선과 다자간협상의 틀만을 고집하면서 남북 양자간의 접촉을 고의적으로 지연시킨다거나 한·미방위조약의 폐기와 미군철수 문제를 들고 나올 가능성이 높다. 또한 다자간 안보대화를 위한 신뢰구축조치를 빌미로 비현실적인 군비감축과 비핵지대화의 즉각적인 실현을 주장할 때 한국정부는 국내적으로 다자간 안보대화 추진정책의 정당성(rationale)에 대한 비판에 직면할 것이다.

북한이 안보대화의 참여를 거부할 경우, 특히 초기에 참가했다가 번복할 경우 동북아 안보대화의 효과는 그만큼 반감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따라서 북한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북한의 의구심을 근원적으로 없애주고 실질적으로 북한이 대화 내지는 협력체에 참여함으로써 얻는 실질적인 소득이 참가하지 않는 것 보다 훨씬 많다는 확신을 주어야 할 것이다. 또한, 역내국가들은 한국정부와의 협조가 없이는 결코 북한이 추구하는 미, 일과의 관계개선이나 경제적인 혜택을 구할 수 없음을 인식시켜야 한다.

3. 韓國의 對應方案

북한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결국 북한의 핵개발이나 대량살상무기개발 및 수출포기에 대한 구체적인 보상을 시도하는 방안이 연구되어야 한다. 최근 이스라엘이 노동1호의 對중동 수출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북한과의 접촉을 통해 금광채굴 및 외교관계수립 등 구체적인 보상방안을 제시한 바 있고, 미국 역시 제네바회담에서 북한 핵시설을 경수로로 전환하는 문제를 의제로 다룬 경험이 있다.

물론 북한에 대한 보상 제공은 자칫 범법자에 대한 지나친 양보라는 차원에서 정서상 받아들여지기 힘든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협력안보(Cooperative Security)를 성사시키기 위해서는 대안개발에 있어서도 발상의 전환이 요구되고 있다. 즉 북한의 악화된 경제사정에 직접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구체적인 청사진을 제시하여 북한의 핵개발과 미사일 수출의 포기를 유도할 수 있다면, 북한이 핵을 포기한 후 경험을 제공할 수 있다는 기존의 대북정책의 범주에서 크게 벗어나는 것은 아니다.

비록 당근을 제공하여 북한이 변한 예가 없다고 할지라도 구체적으로 북한이 얻을 수 있는 사항에 관한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제시해 줄 수 있다면 북한의 정책결정자들이 합리적인 선택을 취할 수 있는 폭을 넓혀준다는 점에서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한국은 북한의 보상요구에 대비하는 점에서 미국과 일본이

참여하는 다자간틀을 활용하는 방안이 효과적일 수 있다. 그러나 북한이 이러한 대안을 거부하고 불참할 경우, 북한을 제외한 주변 5개국간의 대화를 지속함으로써 북한에 대한 국제적인 압력을 증대할 수 있을 것이다.

第 V 章 結論：韓國의 政策的 考慮事項

한국이 동북아에서 다자간 안보대화를 개설하려고 노력하는 가장 중요한 목표는 북한의 개방과 개혁을 유도하고 아·태지역의 협력에 북한을 동참시키고자 하는 것이다. 즉, 남북간의 대화채널이 막힐 경우, 다자간 틀을 활용하여 북한이 외부세계와 계속적인 접촉을 유지하도록 함으로써 핵문제와 같은 분쟁의 소지를 사전에 방지하고 참가국간에 협력을 도모하여 신뢰구축 조치들을 통한 안보증진과 평화정착을 모색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한국의 정책결정자들이 다자간 안보대화의 구체적인 방법론을 다루기에 앞서 선결해야 할 가장 중요한 문제는 북한을 협력안보의 진정한 대화파트너로 간주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하는 점이다. 결국 북한을 유도할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이란 북한이 다자간 안보대화를 통해 실질적인 당근을 얻을 수 있음을 알려주고, 전술적인 측면에서의 형식적인 참여는 미·북 및 미·일관계의 개선을 더욱 어렵게 만들 것이라는 점을 인식시키는 길이다.

결론적으로 북한의 개방과 개혁을 유도함에 있어서 한국정책

결정자들의 과제는 남북당사자간의 채널과 전통적인 우방인 미·일과의 양자 내지 삼자협력채널, 그리고 다자간 안보대화의 세 가지 채널을 전략적으로 조화시키면서 국가이익을 극대화하는 것이다. 이와 관련, 한국정부는 다자간 안보대화가 한반도 분단의 안정적 관리와 통일환경 조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다자간 안보대화에 대한 대응책 마련을 위한 관련부서간 긴밀한 정책 협조를 도모하여야 할 것이다.

目 次

序 文

要 約

第Ⅰ章 序 論 1

第Ⅱ章 東北亞 多者間 安保協力體 構想의 擡頭 4

1. 韓國의 安保思考 轉換 4

2. 多者間 安保協力에 대한 韓國의 期待 7

3. 多者間 安保協力體의 類型과 東北亞에서의 實現 可能性 9

가. 地域安保를 위한 多者的 接近의 類型과 先例 9

나. 協力安保(Cooperative Security) 11

다. 集團安全保障(Collective Security) 및 集團自衛同盟 (Collective Self-Defense)과의 차이점 15

라. 東北亞에서 安保協力體의 實現 可能性 22

第Ⅲ章 亞·太地域의 安保現況과 安保協力에 대한 關聯國들의 立場 26

1. 아시아의 安保現況 26

2. 域內 主要國들의 提案 및 立場 38

가. 美國	38
나. 日本	44
다. 러시아	47
라. 中國	50
마. 韓國	54
3. 域外 關聯國들의 提案 및 立場	58
가. 캐나다	58
나. 濠洲	61
다. 아세안(ASEAN)	64
第Ⅳ章 東北亞 多者間 安保協力體 發展 展望	67
1. 制約要因 및 促進要因	67
가. 制約要因	67
나. 促進要因	71
2. 主要 懸案	73
가. 參加國의 範圍問題	73
나. 議題問題	76
다. 制度化 問題	77
3. 發展 展望	79
第Ⅴ章 東北亞 安保協力體 構成과 南北韓關係	82

1. 安保協力體 構成이 南北韓關係에 미칠 影響	82
2. 北韓의 豫想態度 및 對應策	82
가. 北韓의 豫想態度	82
나. 北韓이 參與를 拒否할 境遇	84
3. 韓國의 對應方案	87
가. 主要懸案과 對應策	87
나. 段階別 發展方向	90
第VI章 結論: 韓國의 政策的 考慮事項	93
參考文獻	97

第 I 章 序 論

냉전종식 이후 새로운 세계질서가 모색되고 있는 가운데 동아시아에서도 多者間 安保協力體 구성의 필요성에 관한 논의가 대두되고 있다. 미국과 일본을 비롯한 아·태지역 국가들이 多者間 安保協力體 구성의 필요성을 느끼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미·소 양국의 안보역할 감소와 중·일 양국의 정치·군사적 역할강화에 따라 아·태지역 전반에 걸쳐 새로운 질서가 형성되고 있기 때문이다. 즉, 역내 안보환경의 변화에 따라 역내국가들은 지역안보의 不確實性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하려는 차원에서 다자간 안보협력을 모색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동북아시아의 경우 역내국가들간 무기도입경쟁과 군사비 증액, 북한의 핵개발 등 군사적 위협 뿐만 아니라, 김일성 사후 북한내부 분쟁에 따른 난민발생 가능성, 혹은 북한 주도의 테러 가능성 등 「非在來式 威脅」(unconventional threats)도 상존하는 상황이다.

따라서 분쟁을 사전에 방지하고 부득이한 분쟁발생시 이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고 관리하자는 취지에서 다자간 안보협상의 필요성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다. 현재 아·태지역내에서 가장 구체적으로 진행중인 다자간 협상은 「아세안 확대외무장관회의」(ASEAN Post Ministerial Conference: ASEAN-PMC, 이하 ASEAN-PMC로 표기)를 통해 실현된 지역안보대화이다. ASEAN-PMC는 아세안(동남아국가연합) 6개국이 7개 대화상대국을 매년 초청하여, 아·태지역의 국가들간의 쌍무문제 뿐만

아니라 탈냉전시대의 지역안보문제와 국제정치 현안에 대한 심도있는 의견교환을 목적으로 구성된 역내 유일의 정부간 공식 대화창구로 한국은 1991년 7월 쿼라룸푸르회의부터 본격적으로 참여해왔다. 1993년 7월 23~26일 싱가포르에서 개최된 금년도 ASEAN-PMC는 기존의 13개 참가국외에 러시아, 중국, 베트남, 라오스 등의 사회주의권 초청국 및 참관국들까지 포함시켜 「아세안 지역포럼」(ASEAN Regional Forum)을 창설하기로 결의했고, 내년 7월 방콕회의에서 본격 가동될 것으로 보인다.

아세안이 지역내 안보문제를 본격적으로 토의하기 위해 안보의제를 채택하고 안보협력을 위한 대화를 개시한 것은 1976년 「쿼라룸푸르선언」 이후 동서냉전을 의식, 안보에 대해 중립적이며 방어적인 입장을 취해오던 오랜 전통을 고려할 때 매우 괄목할만한 변화라고 볼 수 있다. 이는 냉전종식 이후 펼쳐질 새로운 안보상황을 맞아 자신들의 주도로 군사 및 안보문제를 적극 논의함으로써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현재 아세안의 주도로 운영되고 있는 광역차원의 지역안보대화는 1993년 5월 싱가포르에서 개최된 「아세안 고위실무회의」(ASEAN-PMC-SOM)를 통해 북한의 핵위협에 대한 공통된 우려의 입장을 표명하는 등 동북아 및 한반도에 관련된 안보이슈에까지 관심의 영역을 확대시키고 있다. 그러나 한국의 입장에서 볼 때 동남아국가들을 중심으로 만든 다자간 대화는 동북아 특히 한반도에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서 매우 제한적

인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한국은 미국과의 협의하에 현재 동북아 위주의 대화 및 협의체를 별도로 구성하는데 합의하고 이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따라서 본 과제는 첫째, 한국정부가 동북아를 위주로 한 다자간 안보대화 구성에 주도적인 역할을 할 만큼 적극성을 보이게 된 정책변화의 배경을 설명하고자 한다. 둘째, 한국이 현재 참여하고 있는 「아세안 확대외무장관회의」 주도의 「아세안지역포럼」과 별도로 동북아에서 小地域中心의 다자간 안보대화를 구성·참여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實益이 무엇인지를 검토하고자 한다. 셋째, 한국 및 미국의 주도에 의한 안보대화의 구성이 과연 대화수준이상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를 분석하고자 한다. 이와 관련 협력안보의 개념과 목표를 검토해 보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소지역위주의 안보대화를 구성함에 있어서 고려해야할 참가국 範圍問題(scope), 議題問題(agenda), 그리고 制度化問題(level of institutionalization or level of officiability) 등을 논의하고 이에 대한 역내 및 관련국들의 입장을 검토하고자 한다. 참가국의 범위문제와 관련 북한의 참여여부가 관심사항이 되고 있다. 따라서 본과제는 북한이 참여할 경우에 대비한 단기적인 고려사항과 북한이 대화참여를 거부할 경우에 북한을 대화 및 협력체의 일원으로 참여시킬 수 있는 중·장기적인 誘導方案도 제시해 보고자 한다.

第Ⅱ章 東北亞 多者間 安保協力體 構想의 擡頭

1. 韓國의 安保思考 轉換

1991년 7월 22~24일까지 쿼라룸푸르에서 개최된 ASEAN-PMC에 처음으로 참가했던 한국정부의 입장은 지역분쟁 해결방안이나 지역협력강화를 위주로 이루어지는 安保協議에는 적극 참여할 생각이나 유럽안보협력회의(Conference on Security and Cooperation in Europe: CSCE, 이하 CSCE로 표기)와 같은 安保協議體의 창설은 반대한다는 소극적 입장이었다.¹⁾ 그러나 김영삼정부 출범 이후 1993년 5월 31일 한승주 외무장관은 외교협회에서 행한 연설을 통해 한국은 현재 ASEAN-PMC 주도로 진행중인 다자간 안보협력에 적극 동참할 것이나 신뢰회복을 위한 조치들이 광범위한 지역을 대상으로 실행되기 어렵다는 사실을 감안, 小地域中心의 mini-CSCE형 동북아 다자간 안보대화 창설 가능성도 고려하고 있음을 시사한 바 있다.²⁾ 또한 1993년 7월 10일 클린턴 미국대통령의 방한시 동경에서 천명한 「신태평양공동체선언」의 일환으로 동북아지역의 다자간 안보대화를 위한 안보협의회를 구성할 것을 발표했다.³⁾

안보환경의 급격한 변화에도 불구하고 기본적 신뢰구축조차

1) “「아세안확대외상회의」첫참가 의미,” 「世界日報」 1991. 7. 25, p. 3.

2) 한승주외무장관 연설문 “한국 신뢰교의 기초,” (Fundamentals of Korea's New Diplomacy) 서울: 외교협회 1993. 5. 31.

3) “「동북아안보협의회」의 의미,” 「한국일보」 1993. 7. 14, p. 5.

이루어지지 않은 동북아국가들간 관계를 고려할 때, 「다자간 안보대화」, 「공동안보」, 「협력안보」 등은 여전히 낯설고 생소한 개념이다. 따라서 한국의 신정부가 다자간 안보대화 및 협력체 구성에 적극적 관심을 갖게 된 이유, 그리고 이러한 다자간 안보대화의 구성 및 참여에서 발생하는 이익은 무엇인가에 대해 자세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김영삼정부 출범 이후 다자간 안보 협력을 지향하는 외교정책변화의 배경은 다음 몇가지로 요약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바바라 맥두갈(Babara Macdougall) 전임 캐나다 외무성 장관은 최근 밴쿠버에서 행한 연설을 통해 캐나다가 주장해 온 「북태평양안보대화」(North Pacific Cooperative Security Dialogue: NPCSD)의 제안대로 이 지역에 다자간 안보대화가 개설되었다면, 북한 핵문제를 보다 효과적으로 다룰 수 있었을 것이라는 아쉬움을 표시한 바 있다.⁴⁾ 실제로 한국정부는 1993년 3월 12일 북한의 NPT 탈퇴선언으로 시작된 북한 핵문제를 다루는 과정에서 북한의 핵위협과 같은 직접적인 안보문제에 대해 주변국들과의 원활한 협조를 해왔다. 김영삼정부는 다자간 대화채널을 개설한다면 아·태협력에 북한의 동참을 유도함으로써 북한의 핵개발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고 나아가서 북한의 개방과 개혁을 앞당길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또한,

4) Kook-Jin Kim "Approach to Cooperative Security in Northeast Asia: Korea's Perspective," paper presented at the International Symposium on 「Asia in the 21st Century」, Kon-Kuk University (May 11~12, 1993), p. 12.

김일성 사후 북한 내부분열에 따른 난민발생 가능성 등 非軍事的 威脅에 대처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둘째, 미국을 포함한 주변국들의 정책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필요성을 느꼈기 때문이다. 미국은 부시행정부때 까지 아·태지역의 안보문제는 기존의 양자 협력관계를 중심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 多者間 安保協力體 구성방안에 소극적인 입장을 취해 왔다. 그러나, 클린턴 행정부의 출범과 동시에 워렌 크리스토퍼 신임 국무장관이 인준청문회에서 미국의 국내경제 활성화를 위한 예방외교(preventive diplomacy)의 중요성을 강조한 바 있고, 1993년 3월 31일 윈스턴 로드 신임 아·태담당차관보의 인준청문회에서 다자간 안보대화를 아·태지역에서 미국 클린턴 행정부가 추구할 10대목표중의 하나로 취급함으로써 정책변화를 예고하기 시작했다.⁵⁾

한편, 나카야마 일본외상은 1991년 7월 22일 「아세안 확대외무장관회의」에서 정치적인 대화체인 「확대외무장관회의」(PMC)를 안보협의체로 강화·발전시키자는 제안을 내놓았다. 또한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으로 참가국 고위관리들로 구성되는 「아세안 고위실무회의」(SOM)를 구성하자고 제안했다. 「확대외무장관회의」(PMC)에서 지역안보협의를 강화하

5) 윈스턴 로드는 International Herald Tribune紙에 기고를 통해 기존동맹의 확고한 기반유지와 함께 다자간 안보협의를 추진할 것임을 밝힘. (Developing multilateral forums for security consultations while maintaining the solid foundations of our alliances). Winston Lord, "It is Time for America to help Build New Pacific Community," *International Herald Tribune*, April 9, 1993, p. 3.

자는 일본측 제안은 일본이 독자적인 영향력강화를 시도할 경우 수반될 주변국의 반발을 감안, 아세안을 매개로 간접적인 형태로 아·태지역에서 정치적인 주도권을 확대하겠다는 구상으로 파악할 수 있다. 미야자와 일본수상이 1992년 7월 2일 워싱턴 내셔널 프레스 센터에서 행한 연설이나 1993년 1월 방콕에서 천명된 「미야자와 독트린」을 통해 일본은 지역내 안전보장을 위한 정치적 틀을 만들 것을 계속 주장해왔다.

따라서 한국정부 역시 이러한 주요 주변강대국들의 정책변화에 대한 대응전략의 차원에서 多者間 安保協力體 구성논의에 적극적인 관심을 보이게 된 것이다.

셋째, 한국의 경우 다자간 안보협력의 틀을 구축함으로써 장차 지역내 일본 및 중국의 팽창된 군사적 역할을 견제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며 미국의 안보역할 변화에 따르는 불확실성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다는 측면이 고려되었을 것이다.

넷째, 김영삼정부는 미국의 동북아정책 변화 가능성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동북아를 중심으로하는 안보협의체가 구성될 경우 한국의 입장을 보다 효과적으로 반영시킬 수 있다는 점을 고려했기 때문이다.

2. 多者間 安保協力에 대한 韓國의 期待

한국이 기존의 ASEAN-PMC 주도의 광역적인 다자간안보에 참여하고 있는 입장에서 새로운 동북아 다자간 안보대화를 추진하기로 한 배경은 나름대로의 實益을 계산했기 때문이다.

첫째, 分斷管理를 보다 평화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는 점에서 효용성을 갖는다. 한국은 한반도에 직접적인 이해와 영향력을 갖는 미·일·중·러 위주로 안보대화를 구성함으로써 한반도의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에 대해 좀 더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즉 휴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시키는 문제나 북한핵을 평화적으로 이용하는 문제는 남북양자간에 해결하기 어려웠던 사안들로 다자간 협력의 틀속에서 보다 효과적으로 해결될 수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둘째, 한국이 동북아에서 小地域中心의 안보대화구성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실익은 다자간 안보대화를 통해 북한의 개방을 유도해 나갈 수 있다는 점이다. 즉 북한이 이러한 대화의 장에 참여하여 透明性 증대와 신뢰구축을 위한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경우, 북한은 협의체내 국가들의 협조로 외교적 고립 탈피는 물론 경제난 해소에도 도움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그 동안 호전적인 국가로 평가받아 오던 북한 스스로가 지역안보에 기여할 수 있다는 귀중한 경험을 얻을 수 있고 국제적인 신뢰를 회복하는 지름길이 될 것이다. 이러한 신뢰의 경험을 통해 북한은 기존에 갖고 있던 흡수통일에 대한 불안감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현재 각국이 군비증강에 치중하고 있는 동북아의 특수한 안보구조를 고려할 때, 다자간 안보대화를 통해서 역내 국가들간의 군비경쟁을 지양할 수 있을 것이다. 역내 국가간 군비경쟁이 종식된다면 지역 안정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며, 이를 기반

으로 역내 국가들의 경제발전도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3. 多者間 安保協力體의 類型과 東北亞에서의 實現 可能性

동북아나 아·태지역에서 새롭게 대두되기 시작한 다자간 안보대화 및 협의체 구성에 대한 준거들은 냉전종식 이후 유럽의 새로운 안보질서 유지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CSCE이다. 따라서 본절에서는 다자간 안보협력의 여러가지 類型을 개괄적으로 설명하고 CSCE가 기초하고 있는 협력안보의 개념은 무엇인지를 밝히려고 한다. 또한, 동북아에서도 CSCE형 안보협력이 가능한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가. 地域安保를 위한 多者的 接近의 類型과 先例

냉전종식에도 불구하고 아시아, 아프리카지역 및 발칸반도 등 세계 여러지역에서 발생하는 지역분쟁과 이에 따른 강대국들의 개입가능성은 여전히 세계평화를 위협하고 있다. 더욱이 미국의 역내 주둔에 자국의 안보를 의존해 오던 아·태지역 국가들은 미국의 철수에 따른 힘의 空白이 안보의 不確實性을 야기시킬 것을 우려하여 군비증강에 몰두하고 있다. 따라서, 지역 긴장은 지속되고 있으며, 영토문제 등으로 인한 새로운 분쟁 가능성도 증대되고 있다. 이와 같은 새로운 안보위협을 해결하기 위해 현재 활용 가능한 다자간 안보의 유형은 대체로 다음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지난 40여년간 유지되어온 유엔을 통한

集團安全保障(collective security)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이하 NATO로 표기)와 같은 集團自衛同盟(collective self-defense)의 접근방식이 있다. 또한, 새로운 변화에 대응하고 기존 안보유형을 보완하는 의미에서 「協力安保」(cooperative security) 혹은 「共同安保」(common security)의 개념이 점차 그 필요성을 인정받고 있다.⁶⁾

유엔은 집단안전보장 형태로서 냉전이후시대에 접어들어 분쟁예방과 평화유지 역할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노력을 강화하고 있다. 유엔은 현재 캄보디아, 소말리아 및 보스니아 등에 국제 평화유지군을 파견하는 등 적극적인 중재자로서의 역할을 맡고 있으며 좀 더 효과적인 평화집행(peace enforcement)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유엔 회원국들의 적극적 지원을 요청하고 있다. 한편 유럽의 경우 CSCE가 신뢰구축을 통한 새로운 협력안보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구소련과 동구권을 가상적으로 유지·발전되어온 집단자위동맹인 NATO 역시 서유럽의 위기관리와 안보위협에 대처함에 있어서 여전히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나 냉전종식 이후 범유럽 평화유지기구로 새롭게 변신해야 한다는 役割 再定立 요구앞에 고심하고 있다.

6) 공동안보개념의 중심적인 기조는 상호불신에 의한 자국의 무기체계의 개발에 목표를 두기 보다는 공동생존(joint survival)에 두고 있으며, 궁극적으로 상대국에 대항하여 안보를 얻는다고 보다 상대국과 더불어 안보를 얻는다는 것이다. Andrew Mack, "Security Cooperation in Northeast Asia: Problems and Prospects," *Journal of Northeast Asian Studies*, Vol. XI, No. 2(Summer 1992), p. 31.

나. 協力安保(Cooperative Security)

본 절에서는 CSCE가 기초하고 있는 협력안보의 개념을 설명하고 집단안전보장이나 집단자위동맹과의 차이점을 소개하고자 한다. 이는 집단안보 개념 또는 군사적인 동맹 개념과의 혼동을 방지하기 위해서이다.

(1) 概念

협력안보란 회원국들간에 정치·군사적 신뢰를 다져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하는 예방외교(preventive diplomacy)의 성격이 매우 강하며 직접적 문제해결에 목표를 두고 있는 집단안보와는 달리 침략행위에 대한 法的 拘束力이 없으며, 힘을 동원한 강제력이 배제된다. 따라서 예방외교의 정의는 상호간에 일어날 수 있는 분쟁(disputes)의 소지를 사전에 방지하고, 기존 분쟁이 더 큰 분쟁(conflicts)으로 발전되는 것을 막는 한편 분쟁이 이미 발생한 경우 이의 확산을 막기 위한 외교적 행동들을 말한다.⁷⁾ 즉 냉전시대 양극세력간 분쟁을 방지하기 위한 대표적인 기본원칙이 抑止(deterrence)나 封鎖(containment), 核安定(nuclear stability)이었다면, 협력안보의 기조는 양자간 군사동맹에 의해 유지되어 온 기존의 세력균형체제를 보완하거나 장기적으로 대체할 수 있는 것으로, 억지 보다는 再保障

7) Mark M. Lowenthal "Preventive Diplomacy: Prospects and Issues," *CRS Report for Congress*, March 25, 1993, p. 2.

(reassurance)을 추구하고 전통적인 군사적 위협 뿐만 아니라 非軍事的 안보위협 요인을 포괄적으로 다루는데 있다.

따라서 협력안보는 분쟁의 예방을 위하여 관련국들간 對話(dialogue)의 習慣化와 協議過程(consultation)의 개설을 권장한다. 또한 지역안보의 확립을 위하여 다자간 대화가 制度化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한다. 협력안보는 공동의 적을 대상으로 갖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공동안보(common security)와 유사한 특성을 갖는 바, 공동안보 개념과 흔히 혼용되고 있다. 그러나 후자는 “공동(common)이라는 단어보다 협력(cooperative)이라는 개념을 사용할 때, 역내 국가들간 안보정책의 다양성(a greater diversity)이 존재함을 드러낼 수 있다”고 양자간의 미묘한 차이를 지적하기도 한다.⁸⁾

협력안보는 추구하는 목표에 있어서 不完全性を 인정한다는 특징을 두고 있다. 즉 협력안보는 세계정부의 설립과 같은 거대한 목표를 추구하지 않으며, 모든 종류의 무기를 제거하려 하지도 않고, 모든 형태의 폭력을 방지할 수 있다거나 모든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고 보지 않으며, 또한 역내의 다양한 정치적 규범의 차별성을 인정한다.

따라서, 협력안보의 목표는 대화를 통해 透明性を 증대시키고 협력을 확산시킴으로써 공격적인 국가가 의도적이며 조직적

8) David Dewitt and Paul Evans ed. *Conference Report: The Agenda for Cooperative Security in the North Pacific*. Vancouver, British Columbia 21~24 March, 1993(July 1993), York University, Toronto, 1993, pp. xxxv-xxxvi.

인 침략행위, 즉 무력에 의한 영토의 강점이나 폭격에 의한 중요한 자산의 파괴 등과 같은 행위를 준비하지 못하도록 사전에 방지하는데 있다.⁹⁾

협력안보 개념을 근거로 한 다자간 안보대화는 개개의 국가가 동등한 권리를 갖고 모여 상호이익의 차원에서 공동 규칙 및 제도를 창출하는 과정의 출발체로서 대화를 習慣化하는데 우선적 목표를 둔다. 이러한 대화의 습관화를 통해 신뢰를 구축하고 국제적 갈등을 평화적으로 해결하며, 안보위협 해결에 있어서 민주적인 협의과정을 거친다면 각 국가들간 상충된 이해를 조정할 수 있는 規範을 창출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2) 主要事例 및 問題點

협력안보 개념이 기초하고 있는 가장 대표적인 다자간협력의 유형은 CSCE이며 냉전종식 이후 국가간 무력충돌이나 갈등의 사전방지라는 豫防的 次元에서는 어느정도 실효를 거두었다. 그러나, 최근 유고내전사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일단 전쟁이 발발한 경우의 사태해결에는 기본적인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이러한 불완전성에도 불구하고 냉전종식 이후 새로운 유럽질서와 안보를 창출하는데 있어서 CSCE 역할의 중요성은 점증되고 있다. 따라서 1990년 11월 19일 34개 CSCE 회원국가들이 파리에 모여 새로운 유럽의 평화와 질서를 구축하고자 하는 「파

9) Carter, Ashton B., William J. Perry, and John D. Steinbrunner, *A New Concept of Cooperative Security*(Washington, D. C.: The Brookings Institution, 1992), pp. 7~10.

리선언」을 채택한 것은 유럽인들의 평화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반영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CSCE는 1975년 헬싱키 정상회의를 계기로 유럽안보 및 협력 증진을 위해 창설되었으며 유럽지역내 동서 양진영간 영토적 현상유지와 긴장완화를 도모하면서, 경제, 문화, 과학 등 비정치적 분야에서의 교류와 협력을 증진시켰다. 또한, CSCE는 1980년대 중반이후 구소련의 개혁·개방을 유도하여 마침내 동구권의 정치·사회적 변혁과 구소련의 해체를 촉진하는 등 냉전체제를 와해시키는데 중요한 일익을 담당했다.

특히 CSCE는 1990년 11월 파리 정상회의를 계기로 민주주의, 정치적 다원주의, 법의 지배, 기본적 인권존중 등을 공동의 목표로 설정하였고, 화해와 협력에 기초한 새로운 유럽질서를 형성해 나가기로 결정했다. 한편, 제도적 측면에서도 상설기구로서 이사회, 사무국, 분쟁방지센터 및 자유선거사무소를 창설한데 이어 최근 안보협력포럼(FSC), 소수민족담당 고등판무관실, 조정·중재재판소 및 사무총장직 신설 등을 통하여 범유럽안보 및 협력기구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증진시켜 왔다.

비록 유고 및 독립국가연합 분쟁지역 사태해결에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하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아왔지만, CSCE는 독자적인 조사단 및 감시단을 파견하는 등 역내분쟁해결을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최근에 신설된 평화유지활동, 소수민족담당 고등판무관실, 조정·중재 재판소등을 적극 활용하여 CSCE는 유럽내 분쟁의 평화적 해결 및 사전예방활동을 더욱

강화해 나아가고 있다. 앞으로 CSCE의 성공여부는 회원국 상호 간 이해상충을 잘 조정하면서 공동의 이익을 얼마나 확고히 보장하고 결속시키느냐에 달려있다.

다. 集團安全保障(Collective Security) 및 集團自衛同盟 (Collective Self-Defense)과의 차이점

(1) 概念上的 差異點

집단안전보장(이하 집단안보라 약칭)이란 평화와 질서를 수호하려는 측이 압도적인 힘을 가짐으로써 체제내 어느 나라도 감히 평화와 질서를 교란시키지 못하게 만드는 안보체제를 의미한다. 유엔헌장에 의하면 집단안보의 기본목표는 세계평화와 안보를 유지하는 것이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은 분쟁의 평화적 해결, 평화위협이나 침략행위(acts of aggression) 방지 및 제거를 위한 집단적인 조치(collective measure)를 포함한다.¹⁰⁾

집단안보체제는 소속된 회원국들이 기존의 평화와 질서를 수호하기 위해 만든 現狀維持(status quo) 지향의 안전장치이다. 즉 침략행위가 발생할 경우, 나머지 국가들이 침략국에 대한 제재를 가하겠다고 하는 집단적 의사에 의한 안전장치로 敵과 同志가 미리 구분되지 않는다는 점에 그 특징을 두고 있다. 집단

10) A. Leroy Bennett. *International Organizations* (Englewood Cliffs, N. J.: Prentice-Hall, Inc., 1980), p. 5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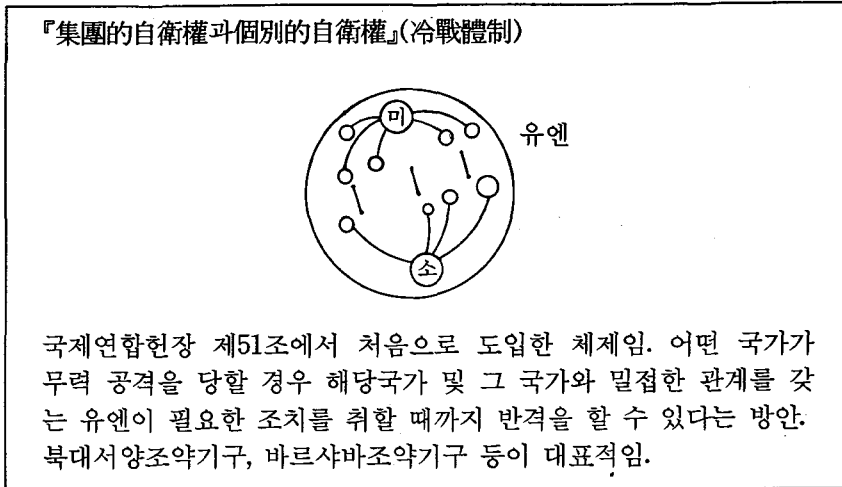
안보체제는 양진영의 국가들이 서로 견제를 하는 가운데 평화
가 힘의 균형에 의해 유지되는 同盟體制(alliance)나 勢力均衡體
制(balance-of-power)와 혼동되어서는 안되며, 또한 특정한 국
가의 예상되는 행위를 규제하기 위해 여러나라가 공동방위동맹
을 맺는 集團自衛(Collective Self-Defense)와도 구분되어야 한다.

집단지위동맹이란 다수국가간에 평화 및 질서유지를 목표로
침략에 대비, 공동투쟁할 것을 합의한 안보체제이지만, 체제 내
의 국가들은 서로 우방관계이고 체제 밖의 침략예상국가들을
적으로 간주하는 명확한 적과 동지의 구분 때문에 집단안보와
는 구분되는 것이다. 집단안보의 주요특징은 적과 동지를 고정
시키지 않고 언제라도 적도 될 수 있고 우방도 될 수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바로 이러한 특성이 약소국들에게는 불안감을
주는 것이다. 따라서 약소국들은 집단안보 보다는 집단자위에
더욱 매력을 느낀다. 즉 자국과 정치적 가치를 같이하는 강대국
과 고정된 우방관계를 맺어 행동을 같이 함으로써 적으로부터
의 위협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거나 실제 침입을 받을 시에도
우방강대국으로부터의 즉각적인 후원을 통해 자국의 안전을 확
보한다는 것이다(참조: <그림 2-1> 「집단지위동맹」).

(2) 主要事例 및 問題點

집단안보는 세력균형에 의한 안보체제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
으로 개발된 안보체제이다(참조: <그림 2-2> 「세력균형에 의
한 안전보장」, <그림 2-3> 「집단안전보장」). 제1차 세계대전

<그림 2-1: 집단적 자위권과 개별적 자위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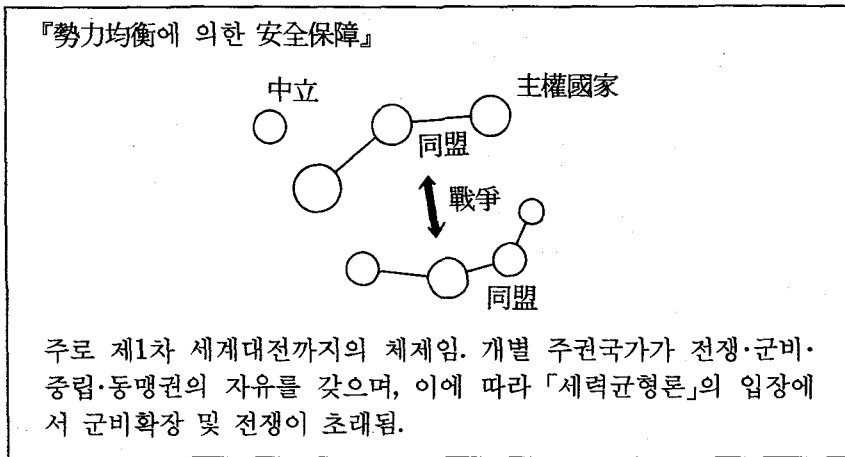


출처: 古關彰一外“『平和基本法』をつくろう,”『世界』(1993. 4), P. 59.

전까지 대부분의 주권국가들은 세력균형론의 입장에서 동맹관계에 의존하거나 때로는 중립을 지켜왔으나 군비확장 및 전쟁의 발발자체를 막을 수는 없었다. 따라서 이러한 개별적 안전보장체제의 약점을 극복하기 위해 고안된 집단안보의 대표적인 유형이 국제연맹(League of Nations)이었다. 국제연맹은 베르사이유조약이 조인된 1920년에 공식 설립되었는데, 모든 국가들을 대상으로 세계 모든 지역에서 침략에 저항하도록 고안된 것이다. 제1차 대전이 세력균형의 불안정성이 가져온 비극적 종말이라고 이해한 미국의 윌슨대통령은 조직적인 힘에 의해 세계평화와 질서를 보장하겠다는 의도로 국제연맹을 추진하였다. 그러나, 미국은 타국이 일으킨 전쟁에 자동적으로 개입될 것을 우려하는 국내 반대 여론에 부닥쳐 가입조차 못하고 말았으며

무력분쟁이 발생했을 경우에도 국제연맹은 강대국들의 기본적인 이해차이로 말미암아, 조직된 힘을 동원하지 못함으로써 평화를 복원할 수 없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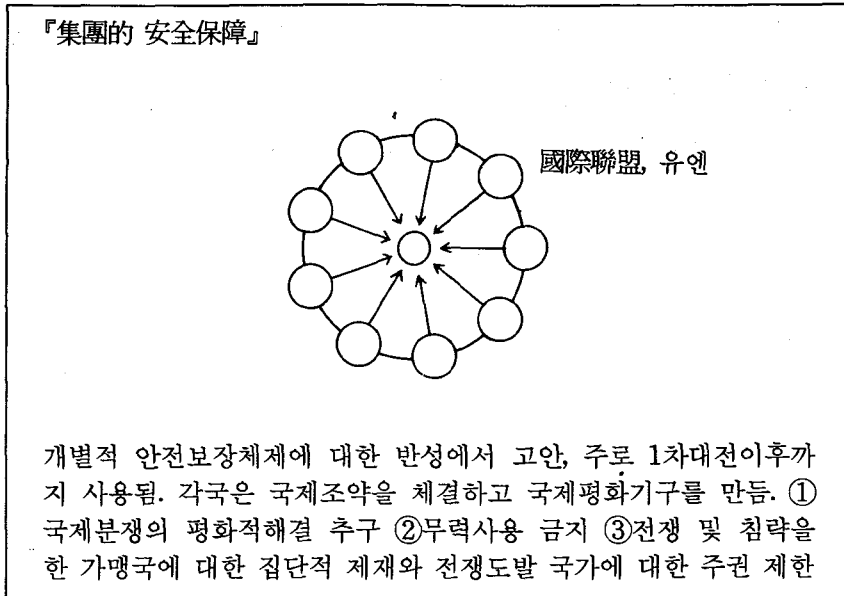
<그림 2-2: 세력균형에의한 안전보장>



출처: 古關彰一外“「平和基本法」をつくろう,” 「世界」(1993. 4), P. 59.

국제연맹의 실패를 교훈삼아 조직된 또 다른 집단안보의 사례는 제2차 세계대전중 등장한 유엔(The United Nations)이다. 유엔은 회원면에서나 지리적인 면에서 범세계적이다. 국제연맹이 조직된 힘을 보유하지 못한 무력한 것이었던데 반하여 유엔은 집단행동을 실행할 수 있는 手段을 확보하는데 보다 적극적이었다. 그러나 안전보장이사회(이하 안보리로 표기)라는 매개체를 통한 집단안보는 안보리 구성 강대국간의 완전한 합의 없이는 조직된 힘을 구사하기 어렵다는 약점을 갖고 있었다. 또한 약소국이 평화를 교란할 때에는 효율적으로 작동할 수 있으나

<그림 2-3> 집단적 안전보장



출처: 古關彰一外“「平和基本法」をつくろう,”『世界』(1993. 4), P. 59.

강대국이 평화 파괴자가 되었을 때에는 전혀 무력한 점이 문제
로 지적되어 왔으며 미국과 소련간의 상호불신과 냉전적 대결
관계로 말미암아 집단안보는 사실상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해
왔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냉전종식은 유엔에게 새로운 시대에 걸맞는 位相과 役割 變
化를 요구하고 있다. 즉 냉전종식은 20세기 군사강대국간에 형
성·유지되어온 군사블럭체제의 종식을 가져왔다. 또한 냉전체
제의 종언은 세계군사 초강대국인 미·소의 세계군사전략에 변
화를 가져왔다. 이는 군수산업에 집중된 양국의 국가자원이 다
른 산업부분으로 전환됨을 의미한다. 냉전이 종식된 현재 세계

는 비군사부문의 발전과 생산성 및 효율성을 극대화시키려는 경제활동을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다. 그러나 냉전체제의 종말로 세계적인 규모의 전쟁 가능성은 줄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局地戰 발발 가능성은 여전히 상존한다고 말할 수 있다. 특히 미·소의 통제력 약화와 남·북간의 빈부격차 심화, 민족주의에 입각한 소수민족들의 분리독립 요구 등으로 지역분쟁 가능성은 오히려 높아진 상태이다.

이와 같은 새로운 분쟁발발 가능성을 고려할 때, 통상적인 유엔의 기능과 역할만으로는 공동의 안전을 보장함에 있어서 부족함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흔히 유엔안보리의 결정들은 강대국의 이익에 의해 좌지우지 되어왔고 구성국의 평등한 입장을 존중하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았으며 분쟁을 해결함에 있어서 물리력을 동원할 경우에도 구성국간 기본적인 입장차이를 노출시키곤 하였다. 또한 오늘날 평화유지군의 역할을 수행하는데 있어 필수적인 경비분담문제와 사용에 관해서도 충분한 지원과 합의를 얻기 힘든 상황이다.

변화의 기로에 서 있다는 점에서 집단자위동맹도 예외는 아니다. 2차대전이후 국제정치사회에서 약소국들의 경우 강대국들과의 집단자위(collective self-defense)만이 자신들이 의지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안보장치였으나 동구권의 경우에서 보듯이 냉전종식과 바르샤바동맹기구의 해체로 인해 집단자위동맹의 명분도 그 만큼 약화되었다. 특히 소련의 위협이 줄어든 현재 개별적 군사동맹이나 자위동맹들 역시 대부분 명분을 상

실패 가고 있다. 이와 관련 집단자위동맹의 대명사격인 NATO의 경우도 동구권을 포함하는 범유럽적인 안보협력체로서의 역할변화를 모색해야 할 단계에 이르렀다.

특히 2차대전 이후 아시아지역에 있어서 미국을 후원국으로 하는 유럽식의 집단자위동맹을 설치하려는 움직임은 아시아내 여러 반공국가들에 의해 끊임없이 추진·시도되어 왔으나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에 우리는 주목해야 할 것이다. 즉 동남아집단안보기구(SEATO)의 경우에서 잘 나타나듯이 미국은 다자간 기구의 실험하에서도 기본적으로 兩者間 同盟에 의존, 지역안보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결성 당시부터 참여를 원했던 한국, 대만, 월남 등을 배제시켰으며, 프랑스, 파키스탄 등 다른 회원국들의 다양한 이해관계로 인해 유럽의 NATO와 같이 공통의 적대국을 갖는 결속력을 유지하지 못했다.¹¹⁾ 특히 아시아의 경우 문화적 내지는 역사적인 대립과 반목이 심해 국가들간에 공동체의식을 형성시키기 어려웠으며 결국 동남아집단

11) 동남아 집단안보기구(Southeast Asia Treaty Organization: SEATO)는 1954년 9월 8일 마닐라에서 호주, 영국, 프랑스, 뉴질랜드, 파키스탄, 필리핀, 태국, 미국 등 8개국에 의해 체결된 동남아 집단안보협정 (Southeast Asia Collective Defense Treaty)에 의거하여 1955년 출범하였으나 1977년 해체되고 말았다. 공산침략에 대응하기위한 아시아판 NATO 모델로 창설된 이 기구는 미국의 인도에 대한 지원으로 파키스탄이 불만을 갖게 되고, 동남아를 중립화하고자 하는 프랑스의 반발과 미국의 베트남전 개입에 영국, 프랑스, 파키스탄 등이 실질적인 도움을 거부함으로써 결국 유명무실해 지고 말았다. SEATO의 창설배경과 역할에 관한 자세한 논의는 George Modelski, "SEATO" in Francis A. Beer, ed. *Alliances: Latent War Communities in the Contemporary World* (New York: Holt, Reinhart and Winston, 1970), pp. 185~234.

안보기구는 완전한 실패라고 볼 수는 없으나 아시아에서 다자간 안보 노력이 성공하기 어려움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로 남아 있는 것이다. 아직도 많은 지역내 국가들이 미국과의 雙務關係를 통해서 보다 많은 혜택과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다는 관념을 쉽사리 포기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논의되고 있는 다자간 안보협력은 미국과의 쌍무적 안보구조의 취약성을 補完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참여국들의 새로운 관심을 끌고 있다.

라. 東北亞에서 安保協力體의 實現 可能性

한승주외무장관은 1993년 5월 31일 외교협회 연설을 통해 한국정부는 아·태 광역의 다자안보대화에 능동적으로 참여하고 그 발전을 도모할 것이나 동북아에서도 「小유럽 安保協力會議」形式(a Mini-CSCE like framework)의 안보협력체를 추진할 필요가 있음을 밝혔다. 그 이유는 중장기적으로 신뢰구축 및 군비통제를 다루기 위해서는 同質性이 부족하고 다양한 이해관계를 갖는 광범위한 지역을 대상으로 하기 보다는 분쟁지역을 중심으로 한 小地域 爲主로 다자간 안보협력을 시도하는 것이 보다 실현 가능성이 높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CSCE 형태의 기구가 동북아에서 실질적으로 운영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시각도 만만치 않다. 회의론자들이 동북아에서 유럽식 안보협력이 실현되기 어렵다고 보는 가장 중요한 이유들은 대략 다음 세가지 이유에서이다. 첫째, 共同敵에 대한 공동의 위협인식이 부족하며 둘째, 아·태지역은 유럽지역에 비해 국가간 또는

민족간 價値의 同質性이 부족하며 셋째, 공산주의가 잔존하고 지역분쟁이 계속되며, 대륙세력과 해양세력간의 대치가 지속되는 등 여전히 지역불안 요인이 존재하고 있다는 점이다.¹²⁾

이와 같은 맥락에서 볼 때 최근 논의가 진행중인 「아세안지역포럼」(Asean Regional Forum)이나 모색중에 있는 동북아안보 대화 구상이 초보적인 대화(dialogue)수준 이상으로 발전하여 실질적인 안보협력을 이루어 나아갈 수 있을 것인지는 아직 장담하기 어렵다. 1967년 이후 나름대로 신뢰의 경험을 축적해온 ASEAN과 달리 안보협력회의가 동북아라는 소지역에서 운영 가능할 것인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CSCE가 갖는 운영상의 원칙과 특성을 잘 이해해야 할 것이다.

이와 관련 CSCE의 특성은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 (1) 理想主義(Idealism): 평화적 공존을 목표로 각 국가가 동등한 입장과 권리를 갖고 참여함으로써 국제정치의 민주화를 달성할 수 있다는 다분히 이상론적인 열망을 내포하고 있으며 미국이나 일본등 강대국의 이해에 종속되지 않기를 원하고 있다.

12) 대부분의 회의론자들은 다양성과 불신을 자장 중요한 장애요인으로 보고 있다. 특히 찰머스 존슨 교수는 미국의 적극성에도 불구하고, 아·태지역에서는 안보협력체 구성에 대한 합의를 구하지 못할 것임을 밝혔다. Harry Harding, "Organizing Asia," paper prepared for the Conference on "Asia in Transition: Toward a New Regional Order," The East-West Center Honolulu, Hawaii (January 4~7, 1993), p. 2; Chalmers Johnson, "Rethinking Asia," *The National Interest* No. 3, (Summer 1993).

- (2) 過程의 民主化(Democratization of Process): 多者間 安保協力體 논의는 구성당사국들의 협의에 의한 결과와 더불어 과정 그 자체에 비중을 두고 있다. 즉 오랜세월을 두고 의제를 논의하는 과정을 중시하며 합의 도출방식에 있어서도 滿場一致의 민주적인 회의형식으로 운영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민주적인 과정을 통해서만이 진정한 의미의 신뢰 구축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이 기본 전제이다.
- (3) 拘束力の 缺如(Lack of Enforcibility): 다자간 안보협력의 개념은 NATO와 같은 집단자위동맹(Collective Self-Defense)이 아닌 협력안보 (Cooperative Security) 차원에서 파악되어야 하며 문제를 사전에 방지 하겠다는 “豫防外交”(Preventive Diplomacy)의 입장이지 결코 문제의 직접적 해결이나 제재조치(sanction)의 도구로서 사용하겠다는 것은 아니다.
- (4) 過程의 繼續性(Continuity of Process): 유럽안보협력회의는 현재 52개국이 참여하고 있는 다자간 안보협력기구이며 1975년 헬싱키선언과 1986년 스톡홀름협약을 거치며 전후 냉전체제속에서도 정치·군사적 신뢰구축을 이룩했다. 또한 이는 냉전종식의 소용돌이 以前서부터 출발, 장기간의 협의에 의해 이룩된 결과이며 새로운 질서에 적응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과 기능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

해 계속 노력한다는 점에 그 특징을 두고 있다.

이상에서 살펴 본 원칙과 특성을 고려할 때 분명한 것은 CSCE는 기존의 NATO나 집단안보로서의 유엔이 수행하기 힘들었던 기능과 역할을 보완해 주는데 기여했지만 결코 안보문제를 직접적으로 해결해 주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지난 30여년의 역사적 전통을 갖는 CSCE와 같은 안보협력회의가 신뢰의 기본바탕이 부족한 동북아의 안보구조속에서 빠른 시일 내에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는 것은 매우 성급한 기대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관련국들의 관심증대와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확산으로 지역 안보협력체 구성 노력은 심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第Ⅲ章 亞·太地域의 安保現況과 安保協力에 대한 關聯國들의 立場

1. 아시아의 安保現況

아시아에서는 유럽의 안보구조와는 달리 블럭과 블럭간의 대결보다 복잡한 非對稱性(asymmetry)의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현재 아시아지역에서 가장 심각한 지역안보문제로 대두되기 시작한 것은 軍備擴張 問題이다. 동서냉전 해소로 전세계의 군비지출액이 3년째 줄어들고 있으나 아시아지역의 무기수입규모는 크게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여전히 긴장의 불씨가 남아 있는 한반도는 말할 것도 없고 동남아 각국도 일본의 재무장과 중국의 원양해군 육성에 따라 저마다 군비확장에 많은 재원을 소모하고 있는 것이다.

스톡홀름 평화연구소(SIPRI)가 최근 밝힌 통계에 의하면 지난 5년간 (87~91) 아·태지역의 무기구입은 전투기, 군함, 탱크 등 세계 재래식무기 구입량의 35%를 차지했다. 이는 중동지역의 22%를 훨씬 앞지르는 것으로 그 심각성을 잘 말해주는 것이다. 10년전 세계군사비의 15%에 불과한 아시아국가들의 방위비가 1991년도에는 8백 50억 달러(1988년 환율기준)로 약 25%까지 증가하였다.¹³⁾

지난 1987년부터 1991년까지 5년간 아·태지역 최대의 무기수

13) 「朝鮮日報」, 1992. 10. 15, p. 14.

입국인 인도에 이어 북한과 남한이 각각 46억달러와 36억 달러의 무기를 구입함으로써 2위와 3위를 차지하고 있을 정도로 동북아에서는 냉전종식에도 불구하고 군비경쟁이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실제로 1992년도 국정감사시 밝혀진 국회질의 내용에 의하면 지난 1988년부터 1992년 9월말까지 5년동안 남한정부가 상업구매로 도입한 무기 및 장비의 총액은 모두 2조 5천 7백 43억원으로 밝혀짐으로써 한국의 방위력증강 노력이 상당한 규모로 진행되어 왔음을 알 수 있다.¹⁴⁾

1992년 남한은 전체예산의 25%인 8조 4천억원을 국방비에 사용했으며 1992년도 국방비 증가율은 전년대비 12.5%의 증가율을 보인 반면 1993년에는 국방비 삭감필요성에 대한 많은 논란 끝에 9.8%로 책정되어 전체예산의 24.3%인(GNP대비 3.6%) 9조 2천 4백 4억원을 사용할 예정이다.¹⁵⁾ 북한도 1991년 4월 8일 1992년도 예산 편성에서 군사비를 전체예산의 11.4%인 45억원(21억 5천만 달러)로 책정했었고 지난 4월 7일 개최된 최고인민회의 제9기 5차회의에서 밝힌 1993년도의 군사비는 전년도와 비슷한 수준으로 11.6%에 해당하는 총 46억 9천 2백 18만원(21억 6천만 달러, 무역환율 1달러에 2.17원 적용)이다. 이는 92년도보다 4.7%가 증가된 액수이다. 국가 예산이 국민총생산의 70%이상을 차지하는 북한의 경우 이러한 예산지출만으

14) 「東亞日報」, 1992. 10. 23, p. 2.

15) *The Korea Herald*, September 1, 1992, p. 6; 「한겨레신문」, 1992. 9. 30, p. 1; 「朝鮮日報」, 1993. 1. 18, p. 4.

로도 엄청난 자원과 비용이 군사부문에 들어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북한의 과다한 군사비 지출은 다른 방법으로도 증명된다. 첫째, 1992년도와 비교해볼 때 인민경제비는 3%, 사회문화비는 2.1%가 각각 증액되었음에 비해 군사비는 4.7%나 증가했다. 군사비 지출이 상대적으로 더 늘어난 셈이다. 남한의 경우 국방비 증가율이 해마다 실질 경제성장율을 상회하고 있고 북한 역시 군사비 인상율이 평균세출인상율(2.9%)을 넘어서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북한의 경우에는 1990년이래 계속 마이너스 성장을 해오고 있는 반면에 군사비는 계속 증액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둘째, 발표된 군사비가 북한의 실질군비라고 보기는 어렵다. 통상적으로 북한은 국방비의 2배이상을 실질군사비로 투자하는 점으로 볼 때 실질군사비는 약 55억 9천만 달러를 지출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군사비 성격의 지출이라도 소관부처가 인민무력부가 아니면 그 지출은 통상 군사비 항목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일반회계예산에서도 인민경제에 지출되는 내용중 공업부문이나 군사시설관련부문이 군사비 용도로 쓰이기 때문이다.¹⁶⁾

군사비 증액과 무기현대화에 대한 노력은 남북한 뿐만이 아닌 주변 국가들의 공통된 관심사이다. 남한 다음으로 많은 무기를 수입해온 대만은 1992년 9월 2일 미국이 중국의 압력을 무

16) 유호열, “북한 분예 넘친 군사비 증액,” 『문화일보』, 1993. 4. 13, p. 7.

릅쓰고 지난 10년간의 對대만 무기금수조치를 해제하고 150대의 F-16전투기를 판매하기로 결정함으로써 자국공군력을 대폭 강화시킬 수 있게 되었다. 대만은 중국군 현대화의 목표가 곧 대만섬의 무력장악이라는 위기감 속에서 92년도 국방예산을 1백 9억달러로 증액함으로써 확고한 군비확장의 의지를 보였다.¹⁷⁾

미국의 대만에 대한 최신예기 판매결정은 중국과 인접한 국가들의 최신무기 구매의욕을 부추키는 효과를 수반할 것으로 보인다. 대만은 미국으로부터의 신예기 도입 이외에 60여대의 프랑스제 미라지2000-5 전투기구매와 라파예트급 순양함 16척의 구입을 결정함으로써 프랑스정부와 중국정부간의 갈등을 불러 일으켰다.¹⁸⁾

한편 대만은 이미 이스라엘과 비밀협정을 체결하고, 크피르(Kfir) 전투기 40여대를 넘겨받기로 합의한 바 있으며 걸프전에서 정확도를 과시한 방어용미사일인 패트리엇 미사일과 공격형 헬기인 슈퍼 코브라의 수입도 추진중이다. 대만은 중국의 강력한 반발로 2척만 인도된 네덜란드의 잠수함 대신 독일로부터 추가로 수척의 잠수함을 구입할 예정이다. 현재 대만의 보유 병력은 47만명이나 국방비는 중국의 68억달러의 약 1.5배인 1

17) 「한겨레신문」 1992. 9. 5, p. 5.

18) 대만은 프랑스를 이용했다는 비판을 불식시키기 위해 미라지전투기의 구입을 추진하기로 했고 프랑스정부는 중국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대북-고용간의 초고속 전철사업과 원전건설을 포함한 대만의 3천억 달러 규모의 6년재건사업에 선두 주자로 참여할 수 있다는 희망을 갖고 전투기 판매를 결정했다. *International Herald Tribune*(August 10, 1992), p. 1, p. 6.

백억달러 수준이며 향후 5년간 GNP의 5.19%수준으로 방위비를 책정하여 국방비의 실제증가율은 10%를 넘을 것이 확실시된다.¹⁹⁾

중국과 일본도 지속적으로 군비증강을 추진하고 있다. 냉전 체제 붕괴이후 미국이 빠져나간 힘의 空白을 틈타 가장 먼저 지역강대국의 위치를 노리고 있는 국가들은 중국과 일본이다. 중국은 현재 산만한 군조직 정비 차원에서 종전 11개 군구편제를 7개 군구로 개편하고 비전투부대를 중심으로 한 4천여개의 단위부대를 해체하였으며 1985년부터 1987년까지 약 100만명에 달하는 병력을 감축하는 등 군의 정예화를 추진하고 있다. 중국은 국방현대화를 위해 러시아 등 구소련연방 국가들로부터 군사장비를 구입하고 있으며 1992년 12월 삼소노프 러시아 국방부장과 옌친대통령의 중국방문시 러시아의 항공기술 지원협조와 수호이 27 전투기, 미그 29기, 디젤 잠수함 구입에 관해 합의한 바 있다. 또한 중국은 원양해군 육성을 위해 운영경비의 부담을 안고도 항공모함 구입을 추진중에 있다. 최근 중국은 신형 구축함 1척, 호위함 25척, 공격형 원자력 잠수함 5척을 새로 갖추는 한편, 육군에 항공국을 신설하고 24개의 집단군에 헬리콥터 부대를 배치할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국방력 확충계획을 입안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²⁰⁾

중국은 1980년대에 들어서면서 「先經濟, 後國防」정책을 채택

19) 「世界日報」, 1992. 6. 22, p. 3.

20) 「東亞日報」, 1993. 7. 14.

함에 따라, 국방예산을 증액하기 보다는 경제력 건설에 더욱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1982년부터 1988년까지 중국의 총예산에서 국방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불과 3.7%(같은 기간 총예산 증가율은 13.5%)에 불과했으나, 1989년 이후 군부의 사기진작과 군사력 증강을 위해 국방예산을 매년 12%이상 증액하여 왔다. 특히 1993년에는 국방예산을 전년대비 14.8%나 증액, 73억 달러로 책정하였다<표 3-1 참조>.

<표3-1> 중국의 국방비 증액 추세

연 도	87	88	89	90	91	92	93
국방비(억원)	209.7	217.9	251.5	290.3	330.3	370.0	425.0
전년대비 증가율(%)	1.2	3.9	15.4	15.4	13.8	12.0	14.8
재정지출중국방비(%)	8.6	8.1	8.4	8.4	9.3	9.5	8.0
예산증가율(%)						8.6	6.8

출처: 中國國家統計局, 「中國統計年鑑 1992」(北京: 中國統計出版社, 1992);
劉仲黎, “關於1992年國家豫算執行情況和1993年國家豫算草案的報告,”
「人民日報」, 1993. 4. 4.

그러나 중국의 국방예산이 대외 군사지원이나 무기구입비, 군수산업 관련 예산 등은 제외시키고 인건비, 보급물자, 식량, 급료 등만을 포함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실제 국방비 지출액은 공표된 예산의 2~3배는 될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²¹⁾

일본역시 아시아지역에서의 정치·안보적인 역할을 증대시키

21) 황병무, 「新中國軍事論」(서울: 법문사, 1992), pp. 87~92.

기 위해 지속적으로 군사력을 증강시키고 있다. 일본은 1983년부터 1987년까지 「56中期業務計劃」 및 「第1次 中期防衛力整備計劃(1986~1990)」을 통해 1,000해리 해상수송로 방위능력의 제고에 힘써 왔으며, 1991년부터 1995년까지 지속될 「第2次 新中

〈표3-2〉 中期防수정에 의한 主要裝備와 經費의 감축 및 達成狀況

		當初計劃	수정후 계획	削減數 (額)	91+92+93 年度 發注數	達成率 (%)	單 價 (億円)
陸 上 自 衛 隊	戰 車	132兩	108兩	24兩	26+20+20兩	61.1	9.4
	火 砲	716門	536門	180門	83+129+129門	54.3	
	新多連裝로켓트 시스템	36兩	36兩	0兩	0+9+9兩	50.0	21.5
	裝甲車	218兩	193兩	25兩	42+34+34兩	57.0	
	地對艦誘導彈	40基	40基	0基	8+8+8基	60.0	15.0
	對戰車헬리콥터	20機	18機	2機	6+4+2機	66.7	27.8
	輸送헬리콥터	14機	12機	2機	3+3+2機	66.7	59.3
海 上 自 衛 隊	護 衛 艦	10雙	8雙	2雙	2+1+1雙	50.0	이지스함 1,148.7
	潛 水 艦	5雙	5雙	0雙	1+1+1雙	60.0	
	對潛哨戒機 P3C	8機	5機	3機	2+1+1機	80.0	
	對艦헬리콥터	36機	31機	5機	5+7+4機	51.6	
	侵海헬리콥터	1機	1機	0機	1+0+0機	100.0	
航 空 自 衛 隊	戰闘機 F15	42機	29機	13機	8+7+4機	65.5	136.9
	輸送機 C130	3機	1機	2機	0+0+0機	0.0	
	輸送헬리콥터	2機	2機	0機	1+0+0機	50.0	
	空中조기경보 기AWACS	4機	4機	0機	0+0+2機	50.0	569.8
	中等練習機	90機	68機	22機	21+19+9機	72.1	26.3
經 費	방위비총액	22조7500억 엔(연평균 3.0%増)	22조1,700억 엔(연평균 2.1%増)	5,800억엔	[19+20+20%]	총합59.0	136.9
	전투장비계약액	5조엔	4조4400억엔	5,600억엔	[20+19+20%]	총합59.0	

注: 經費는 90年度價格, []은 年度別達成率, 單價는 93年度豫算 計上價格

출처: 前田壽夫, “「軍事大國・日本」九三年度防衛豫算, 「軍縮問題資料」, No. 151 (1993. 6), p. 69.

期防衛力整備計劃」에 약 22조 7천 5백엔을 투자하여, 호위함의 현대화, 최신예미사일 도입 등을 통해 지역방위역할을 강화하고자 모색하고 있다. 「第2次 新中期防衛力整備計劃」에 따른 주요장비의 도입계획과 수정된 계획 그리고 1993년 현재의 진척률은 <표 3-2>와 같다.

또한 일본은 자위대의 해상활동을 남지나해에 이르는 지역까지 공식적으로 확대하여 일본의 방위개념을 專守防衛로부터 地域防衛 개념으로 전환시키고 있으며 1991년 1월 이후 필리핀 영공을 통과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는 등 지역안보를 실질적으로 담당할 경우 필요한 군사력 확보에 열중하고 있다. 일본은 또한 북한의 노동1호 미사일 발사실험 및 핵개발 의혹과 관련, 1993년 9월경 미국과 「전역 미사일 방어시스템」(Theater Missile Defense System: TDM)으로 알려진 미국의 새로운 미사일 방어 시스템에 관한 기술을 이전받는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며 만약 방공 시스템을 미국으로부터 구입할 경우 이는 향후 더욱 많은 군비가 소요되어야 함을 의미한다.²²⁾

동남아국가들간에도 군비증강은 예외가 아니다. 싱가포르의 GNP의 약 6%에 달하는 25억달러를 군현대화에 투자하고 있으며 미국으로부터 최신예 다목적 전투기를 구입함으로써 낙후된

22) 하타케야마 시게루 일본방위청 국장은 “일본정부는 개량형 패트리어트 미사일 개발계획을 위해 국방예산에 9억 5천만달러를 별도로 책정해 놓고 있으나 실전 배치는 오는 1995년말에나 가능할 것이라고 했으며 오는 1996년부터 시작되는 5개년 군장비현대화 계획을 통해 TDM기술을 연구할 것”이라고 밝힘. 「中央日報」, 1993. 6. 30, p. 7; 「世界日報」, 1993. 8. 12, p. 2.

무기체계를 갖고 있는 주변국가들의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태국 역시 지난해 미국으로부터 F-16, F-18 등의 최신예 전투기와 C-130수송기 등을 도입했다. 말레이시아는 현재 주력기종의 노후화에 따른 최신형 전투기의 구입에 매우 적극적이다. 특히 러시아제 미그 29기 18대를 도입할 것을 최종적으로 검토하고 있으며 미그 35기의 구매에도 관심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미국의 FA-18기 역시 협상대상에서 완전히 배제된 것은 아니다. 한편 말레이시아는 영국으로부터 방공레이더 시스템과 British Aerospace사가 제작한 지상공격형 호크기 8대를 1994년까지 도입할 것으로 보이며, 해군력 강화를 위해 1996년까지 영국으로부터 2척의 프리키프함을 추가로 도입할 예정이다. 인도네시아 역시 舊동독의 해군함정의 약 1/3수준인 39척의 각종함정을 구입하기로 했으며 영국으로부터 24대의 호크기를 9억달러에 구입하기로 계약을 맺었고 미국으로부터 공중조기경보기(AWACS)를 구입하는 문제를 검토하고 있다.²³⁾ 한편, 호주의 로버트 레이 국방장관 역시 1993년 6월 29일 성명을 통해 미국의 F-111G 장거리 전폭기 15대를 구입할 계획이 있음을 시사했다.²⁴⁾

동북아 및 동남아시아의 각국이 이처럼 軍備擴張과 裝備現代化에 나서는 이유는 대략 다음 네가지로 들 수 있다. 첫째, 냉전종식이 불러온 이 지역내 질서의 변화 때문이다. 즉 아시아

23) 「中央日報」, 1993. 6. 29, p. 25.

24) 「中央日報」, 1993. 6. 30, p. 7.

각국의 경우, 안보위협은 상대적으로 줄어든 반면 不確實性에 대한 불안감이 급증했다고 볼 수 있다. 이 지역에서 러시아의 위협이 감소함에 따라 미국의 역할 또한 축소되고 이러한 미국의 감군 및 철수로 인해 발생할 힘의 空白(power vacuum)에 대한 우려가 군비경쟁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 특히 이 지역 국가들은 세계적인 무역국들로 수출입 물동량의 海上依存도가 높은 실정이다. 그러나, 해양의존도에 비해 해상안보를 책임질 해군력은 매우 취약한 상태이다. 따라서 관련 이해당사국들은 남사군도와 같은 지역분쟁과 해적들의 출몰로부터 해상로를 보호하기 위해 해군력 및 공군력 확보에 주력하고 있다.

둘째, 탈냉전이후 힘의 空白期를 틈탄 역내 국가들의 방위증강 의도도 간과할 수 없는 주요원인이다. 특히 지역내 많은 신흥공업국들의 자주국방에 대한 열의는 대단하며, 선진 무기생산국들과 체결한 무기특허협정을 이용, 제3국에 보다 많은 양의 무기수출을 하거나 항공산업이나 조선기술 등 고도의 기술을 습득하여 민간분야에 移轉하거나 활용하고자 하는 의도가 숨어 있다. 즉 한국, 대만, 싱가포르 및 말레이시아는 러시아의 탈냉전이후 무기수출정책의 변화와 서구제국들간의 적극적인 판매전략과 경쟁을 의식하여,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높은 기술과 첨단무기를 예전보다 쉽게 구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실제로 이들 국가들은 세계 무기시장이 공급자의 시장에서 구매자의 시장으로 변모하는 이점을 활용하여, 값싸게 무기가 공급될 때에 보다 많은 현대식 무기를 비축하고자 하는 입장이다.²⁰⁾

셋째, 남중국해를 중심으로 한 중국 해군력의 신장과 일본의 재무장 가능성에 대한 전통적인 우려가 이들의 방산노력을 크게 자극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일본과 중국의 위협은 이들의 방산확대 및 첨단무기구입의 정당성을 제공해 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특히 중국의 항공모함 구입추진과 더불어 일본이 항공모함 호위에 필수적인 7천 2백톤급 대형유도구축함(이지스무기체계장착) 8척을 발주하고 있는 것은 기존의 防禦型 함대체제에서 攻擊型 함대체제로 전환하려는 의도가 내재되어 있다는 주장도 있다.²⁵⁾

넷째, 아시아 시장을 통해 탈냉전으로 인한 무기산업의 불황을 타개하려는 주요 무기수출국들의 적극적 정책도 한 원인이 되고 있다. 동서 군비경쟁의 결과로 비대해진 군수산업체들은 탈냉전의 군축러시에 직면, 새로운 시장개척을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특히 경기침체에 시달리고 있는 미국, 영국, 프랑스 등과 시장경제의 도입으로 고전하고 있는 러시아, 체코 등은 군수산업의 斜陽化에 따른 경제난 심화를 방관만 하고 있을 수 없는 입장이다. 최근 미국이 중국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대만에 전투기를 판매하기로 결정한 것은 중국의 군사력 증강에 대한 대응이 주요 이유일 것이나 미국내 주요 군수업체의 고용축소에 따른 정치·사회적인 부작용을 염두에 둔 조치였다. 또한 러

25) "Asia's Arms Race," *The Economist* (February 20, 1993), pp. 19~21.

26) 강영오, "통일대비 해군력 강화를," 『中央日報』, 1992. 9. 2. p. 9; Michael Richardson, "Asia Seeks a Risk in Tokyo-Beijing Military Rivalry," *International Herald Tribune*, October 20, 1992, p. 1, p. 5.

시아 및 프랑스와 같은 주요 무기수출국들의 입장에서조차 遊休武器의 처리를 위해 간과할 수 없는 곳이 높은 購買力을 지닌 아시아지역이다. 그 동안 이들 아시아 국가들은 세계최대의 경제성장을 보이며 고가의 첨단무기들을 구매할 능력을 갖추고 있기 때문이다.²⁷⁾

마지막으로, 통제장치의 부재와 주요 무기수출국 군수산업의 민수전환 노력의 부진 등을 들 수 있다. 즉 이 지역이 미국 및 기타 주요 무기수출국들의 주요 관심 대상지로 취급되는 이유는 아직도 동아시아에 긴장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북한 및 중국의 핵개발 의지나 군사비 증가규모 등이 역내 여러국가들의 안보의식을 고취시키고 있으며, 무엇보다도 지역내 상호 경쟁국간에 무기통제나 신뢰구축을 制度化할 아무런 제도적 장치도 없다는 것이 심각한 문제이다.²⁸⁾ 또한 미국 및 주요 무기수출국내의 군수산업의 民需轉換 속도가 매우 더디며 성공율도 저조한 실정이고 전환에 필요한 재원마련이 가장 어려운 과제로 남아 있다. 이들 국가들은 遊休武器 판매로 손쉽게 전환자금을 충당할 수 있다는 잇점 때문에 아시아 지역국가들에 대한 무기공급을 쉽사리 중단하기 어려운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무기거래의 증가와 군비확장은 이지역 안보의 가장 시급한 해결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특히 북한의 NPT 탈퇴선언에 따른 긴장

27) 홍규덕, “탈냉전과 동아시아 군비확장,” 『평화연구』 제2호, 1992. p. 151.

28) 통제장치의 필요성을 강조한 논문으로는 Janne E. Nolan, “The Global Arms Market after the Gulf War: Prospects for Control,” *The Washington Quarterly* (Summer 1991), pp. 201~09.

은 이와같은 무기구매와 방위력증강의 추세를 촉진시킨 점도 없지 않다.²⁹⁾ 이러한 군비경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역내국가들과 관련강대국들은 다자간 안보대화 또는 협의체를 만들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

2. 域內 主要國들의 提案 및 立場

가. 美國

미국은 多者間 安保協力 논의가 역내 국가간의 전통적인 兩者 동맹관계를 저하시킬 것이라는 우려와 과거 지속적으로 제시되었던 소련의 집단안보주장이 아·태지역에서 우위를 차지하고 있는 미해군력을 상쇄시키기 위한 목적을 갖고 있다는 판단하에 多者間 安保構想에 기본적으로 반대하는 입장을 취해 왔다. 그러나 동구권의 몰락과 구소련연방의 해체 등 세계 안보환경의 변화에 따라 미국은 대아시아 정책의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고 있다.

미국은 세계 경찰역할 수행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이면서 냉전종식 이후 새로운 안보환경 변화에 보다 효율적으로 적응하기 위해 해외군사력의 점진적인 감축을 시도하고 아시아에 있어서도 일정한 수준의 지역내 다자간 안보협력을 수용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 대표적인 예로 베이커 전 국무장관은

29) 일본의 패트리어트 미사일 구입과 미국으로부터의 미사일 방어시스템 도입추진 배경은 그 대표적인 예이다. 『世界日報』, 1993. 8. 12, p. 4.

남북회담 결과의 국제적 보장과 공동 안보관심사의 활성화를 위해 남북한과 주변 4대강국간의 「협업체」를 만들자는 제안이 담긴 논문을 1991년 11월 동아시아 순방과 「아·태경제협력각료 회의」(Asian Pacific Economic Cooperation, 이하 APEC으로 표기) 서울회의를 앞둔 시점에서 발표한 바 있다.³⁰⁾

베이커 당시 국무장관은 북한 핵위협을 해소하기 위해 한반도와 관련있는 강대국들이 「2+4」형식을 통해 영향력을 발휘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으며 남북대화의 지원, 한반도의 긴장완화, 공동 안보관심사의 협력촉진, 남북간에 체결한 협정의 보장 등을 同 회의의 주요 목표로 제시했다. 그는 한반도 문제 해결에 있어서 남북한간 대화가 가장 중요하다는 점은 인정하나 미, 일, 중, 소 모두가 한반도에 중요한 이해관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남북대화 결과를 보장하기 위한 회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견해는 리차드 솔로몬 전국무성 동아시아담당 차관보가 1990년에 행한 연설(샌디에고 선언)에서 주장한 「6자회담」과 일맥상통하는 것으로, 특히 이 연설에서 솔로몬은 북한 핵문제를 주변 4강국의 공통된 우려사항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³¹⁾

이러한 미국 고위정책결정자들의 일련의 발언을 놓고 볼 때,

30) 「國民日報」, 「한겨레신문」, 「朝鮮日報」 1991. 11. 9.

31) Richard Solomon, "Asian Security in the 1990s: Integration in Economics, Diversity in Defense," An Address to the University of California, at San Diego Graduate School of International Relations and Pacific Studies, October 30, 1990. Backgrounder (Seoul: USIS, November 1, 1990).

소련 및 동구권의 변화 이후 미국의 새로운 아시아정책의 일환으로 경제분야에서는 APEC을 중심으로 한 다자간 협력의 틀을 다지는 한편, 냉전적 구조가 계속되고 있는 한반도문제의 타결을 위해서는 6자회담 방식으로 접근하자는 의도로 볼 수 있다. 또한 「2+4」 방식은 미군의 前進配置에 의한 기존의 안보구조가 유지될 경우라도 규모의 감소가 불가피한 상황을 인식하여 제안된 것으로 결국 다자간 협상에 의해 기존의 안보구조를 보완할 수 있으리라는 판단하에 제시되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미국은 캄보디아 문제나 북한의 핵대응에서 경험했듯이 분쟁지역 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 常時的이 아닌, 一時的(ad-hoc) 형태의 다자간 협력이 유용함을 깨닫게 되었다. 그러나 미국은 다자간 안보협력을 制度化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여전히 반대하고 있으며 “문제를 야기하는 해결책”(solutions in search of a problem)으로 간주해 왔다. 베이커는 “안보문제의 다자간 접근방식이 서서히 생성되고 있으나... 지금과 같이 초기단계에 있어서는 지나치게 구조적인 접근에 얽매이지 않고 다자간 행동을 취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데 주력해야 하며 특히 아·태지역에 있어서는 機能이 形式보다 앞서야만 한다”고 주장했다.³²⁾

미국의 클린턴 행정부는 1993년 7월 7일 도쿄에서 「신태평양 공동체」 구상을 밝힌 데 이어 7월 10일 서울에서 「아·태지역안

32) Stewart Henderson, “Canada and Asia-Pacific Security: the North Pacific Security Dialogue: Recent Trends,” North Pacific Cooperative Security Dialogue, York University, Toronto, 1992, p. 4.

보대화」 구상에 대한 검토작업에 착수할 것을 제안했고, 이미 5월 30일 「뉴욕타임스」에 의해 여론에 공개된 바 있는 「윈-홀드-윈」군사전략 초안 등을 통해 국내적으로 국방비를 줄이면서 미국의 방위공약을 동시에 충족시키겠다는 의지를 표명하고 있다.³³⁾

특히 북한의 핵개발과 국제사찰 거부가 동북아 안정에 있어서 심각한 불안요인이며 위협이라고 인식하고 있는 미국은 주변우방국들 및 중국, 러시아까지 포함시키는 東北亞 多者間 安保協力을 통해 장차 군축을 포함한 지역내 군비경쟁 억제와 각국간 신뢰조성을 통한 지역안정을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미국은 현재 아세안의 주도로 추진중인 多者間 安保協力體 구성노력에 적극 협조하고 있으며 지지하는 입장이다. 그러나 정치-경제-안보를 연결하는 「신태평양공동체」를 실질적으로 주도하고자 하는 클린턴 행정부는 동북아 다자간 안보대화를 구성하여, APEC과 함께 두개의 軸으로 삼을 계산이다.³⁴⁾ 말레이시아를 필두로 일부 아세안 국가들이 지역적 독자성 유지를 이유로 「동아시아 경제권」(East Asia Economic Caucus: EAEC,

33) 결국 이러한 미국의 win-hold-win 작전개념은 동북아의 우방들의 우려를 자아내게 되었고 한국 및 중동 양쪽 전선에서 모두 승리할 수 있다는 win-win 개념으로 변경되었다. 그러나 국방비를 전반적으로 삭감하고 불필요한 병력을 감축한다는 점에서는 변화가 없다. 「世界日報」, 1993. 8. 12, p. 4.

34) Michael Richardson, "Clinton, With Eye on Trade, Calls for a Pacific Rim Summit," *International Herald Tribune*(July 9, 1993), p. 6.

이하 EAEC로 표기)에 대한 구상을 고집했으나 인도네시아 등 대부분의 국가들이 APEC 내부기구로 자리잡는 선에서 타협을 원하고 있으며 1993년 11월 시애틀의 APEC 회담을 정상회담으로 격상시키자는 클린턴의 제안에 대해서도 참석할 뜻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미국은 아·태지역의 안보문제가 지나치게 아세안 중심으로 운영될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금치 못하고 있으며 일부 아세안 국가지도자들의 地域的 排他性은 향후 미국-아세안간에 해결해야 할 커다란 문제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미국은 동시에 안보문제에 관한 미국의 주도로 議題(agenda)를 설정해야 한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

따라서 한국과 미국이 중심이 되어 추진중인 동북아 小地域 中心의 지역안보대화 개설 움직임은 ASEAN의 입장에서 볼 때, 미국이 역내 均衡者로서의 역할을 지속적으로 수행하겠다는 의미로 파악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미국은 중국이나 러시아의 안보협력 참여가 궁극적으로 필요하다는 데 동의하면서도 이들 양대 국가가 다자간 대화에 직접적으로 참여하는 문제에는 매우 신중한 입장을 취해왔다. 따라서 1993년 7월 싱가포르에서 개최된 ASEAN-PMC 회담에 최초로 招請者(guest) 자격으로 참여가 허용된 중국과 러시아가 안보협력체내에서 미국과 같은 영향력을 발휘하기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미국의 다자간 안보정책에 대한 구체적인 관심은 1993년 3월 31일 윈스턴 로드 신임 동아태담당 차관보가 인준청문회에서 발표한 연설문중에 잘 나타나 있다. 로드 차관보는 아·태지역에

서의 10대목표중 하나로 多者間 安保協力の 발전을 언급함으로써 미국이 이 지역내 우방들과의 확고한 동맹기반유지를 補充하는 개념으로 다자간 대화의 구성을 추진할 것임을 예고한 바 있다.³⁵⁾ 또한 지난 5월 20~21일 싱가포르에서 개최된 ASEAN-PMC의 의제확정을 위한 고위급 실무협의회(SOM)에 윈스턴 로드 동아·태담당차관보가 참석하여, 북한 핵문제와 관련하여 유엔결의안 825호의 빠른 해결을 촉구하는 등 각국정부와 동북아 안보문제에 관련한 폭넓은 의견교환을 갖음으로써 미국신행정부의 多者間 安保協力에 대한 새로운 관심과 의지를 표명하였다.³⁶⁾

이러한 미국의 관심은 클린턴 대통령의 방한시(1993. 7. 10)에 보다 구체화되었다. 미국은 클린턴의 방한을 계기로 한·미 양국간에 동북아 다자간 안보대화를 위한 안보협의회를 구성하기로 합의했다. 이와 관련, 미국은 7월 26~27일 미국 샌디에고 대학 부설 「국제 갈등 및 협력연구소」(Institute on Global Conflict and Cooperation:IGCC)가 民·官이 참석(track two)하는 형식으로 주관한 「IGCC 동북아협력회의」(IGCC Northeast Asia Cooperation, 이하 동북아협력회의로 표기) 준비회의 개최를 지

35) "A New Pacific Community Ten Goals For American Policy," Opening Statement at Confirmation Hearings for Ambassador Winston Lord Assistant Secretary of State-Designate Bureau of East Asian and Pacific Affairs, March 31, 1993.

36) 제1차 고위급실무회의의 결과에 관한 내용과 배경설명은 Chairman's Statement: ASEAN Post-Ministerial Conferences Senior Officials Meeting, Singapore, 20~21 May, 1993.

원했고 미국무부의 관리를 파견했다. 미국은 금년 10월 같은 장소에서 동북아 다자간 안보대화를 위한 「동북아협력회의」 본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미국의 대화추진에 대한 열의를 볼 때, 미국은 다자간 대화의 틀을 활용하여 북한을 개방으로 유도하고 또 국제사회에 참여시킴으로서 한반도의 안정화를 꾀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 같다. 또한, 미국은 이러한 대화의 틀에 중국과 일본을 참여시킴으로써 장차 신뢰안보구조조치들의 실천을 통해 양국의 군사적 역할과 군비경쟁도 동시에 牽制할 수 있다는 戰略的 고려도 감안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나. 日本

일본은 향후 동아시아에서 국제질서 변화와 다양한 역내문제들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기존의 兩者間 安保關係를 補完하는 多者間 安保對話 및 協力에 적극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일본은 1990년까지만 해도 역내 다자간 안보협력 문제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으로 일관해 왔다. 일본은 제2차 대전 종결 후 현재에 이르기까지 자국의 안보를 거의 전적으로 미·일 동맹에 의존해 왔다. 대부분의 일본정책결정자들은 일본민주주의의 성공과 경제적 번영이 미·일 동맹의 틀 안에서 가능하다고 인식하고 있었으며, 多者間 安保協力이 오히려 기존의 미·일 동맹을 약화시킬 가능성에 대해서 우려해 왔다. 또한 일본은 영토 분쟁과 같은 양자간의 문제가 다자간 대화의 틀로는 효과적으로 해결될 수 없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과거 미국측이 보여준

다자간 협상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 역시 일본을 소극적으로 만든 원인이 되었다.

최근 일본이 다자간 안보에 적극성을 띠게 된 이유는 냉전종식으로 역내안보환경이 급격히 변화하고 있으며 현재와 같은 미·일 안보관계가 영구히 지속될 것이라고 단언하기 어려운 실정임을 인식했기 때문이다. 미국이 장차 아시아에서 철수하거나 중국이 군사적인 대국으로 성장할 가능성, 그리고 북한의 핵 위협이나 역내 군비경쟁을 통한 돌발사태 방지 등을 위해 다자간 안보대화의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으며 일본 역시 이에 적극 동참해야 한다는 인식을 갖게 되었다.³⁷⁾

1991년 7월 나카야마 타로 일본외상이 ASEAN-PMC에서 「나카야마 제안」을 발표하면서 일본은 多者間 安保協力에 적극적인 관심을 표명하기 시작했다. 미야자와 기이치 일본수상은 1992년 7월 2일 워싱턴 「내셔널 프레스 클럽」에서 행한 연설을 통해 아·태지역의 신뢰구축을 위하여 ASEAN-PMC등 기존의 제도를 활용하여 多者間 安保協력을 긴밀히 하면서 장래 중국 및 러시아를 포함하는 지역내 안전보장을 위한 정치적 대화의 틀을 만들자고 제안했다. 일본은 지역안보문제에 있어서 아세

37) 1990년대에 들어선후 일본국내 행해진 다자간 안보협력논의는 Yukio Satoh, "Asian Pacific Process for Stability and Security," the 5th Asia-Pacific Roundtable: Confidence building and Conflict Reduction in the Pacific(Kuala Lumpur: June 10~14, 1991).; Hisayoshi Ina, "A New Multilateral Approach for the Pacific: Beyond the Bilateral Security Network," (The Johns Hopkins Foreign Policy Institute papers, 1993).

안을 중심으로 한 공식 안보협력체가 발족할 경우 자국의 역할 및 활동확대에 긍정적인 기회를 부여할 것으로 믿고 있으며 「미야자와 독트린」을 통해 이러한 ASEAN-PMC중심의 움직임에 적극 동조하고 있다.

일본은 다자간대화를 성사시켜서 일본자신이 군사대국화하고 있다는 기타 아시아국가들의 우려를 희석시키는 동시에 자국의 정치적 영향력을 제고시키려고 하고 있다. 일본은 최근까지 아시아 지역안보를 위해 二元的 接近(two-track approach)을 시도하여 왔다. 즉, 한반도나 캄보디아, 남중국해 등 국지적 지역분쟁은 관련당사국들의 문제해결 노력을 촉구하는 한편, ASEAN에 중점을 둔 광역적인 안보대화를 추진하는 방법이다.³⁸⁾ 일본이 그 동안 ASEAN-PMC를 통한 안보대화에 적극적이었던 이유는 아세안을 중심으로 한 안보협력을 통해 자국의 국제적 역할을 가장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일본은 미국이 소지역 차원에서 동북아지역의 안보협의회를 구성하려는 적극적인 자세를 이 지역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을 계속적으로 유지하겠다는 의지로 파악하고, 미국 주도에 따른 한·미·일 안보협력의 형태로 동북아 다자간 안보대화의 창설을 지원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샌디에고 준비회의에서 나타난 것 처럼, 미국과는 달리 일본은 북한의 핵위협과 노동1호 미사일의

38) Richardson, "In Asia-Pacific, a New Push for Security Accords," *International Herald Tribune*, March 30, 1993. p. 5.

직접적인 위협을 받고 있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³⁹⁾ 안보대화가 단순한 대화를 위한 것 보다는 실질적인 信賴構築措置들이 논의되고 또 실천될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강력히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다. 러시아

다자간 안보협력과 관련, 러시아는 가장 많은 제안을 해왔으며 특히 고르바초프의 제안은 초기 미국, 일본 등으로부터 즉각적인 거부반응을 받기도 했다. 고르바초프는 「블라디보스톡 연설」(1986. 7. 29)을 통해 아시아판 헬싱키회담을 만들것을 제안한 바 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은 소련도 아시아 태평양국가의 일원이며 아·태지역의 평화는 궁극적으로 이 지역의 모든 국가를 포괄하는 집단안보체제를 구축함으로써 달성될 수 있다는 것이었다. 타국에 대한 불간섭원칙이나 핵무기제한, 해군활동의 감소, 군비감축 등을 주장한 것은 소련이 더 이상 군비확장경쟁에 자원을 투자할 수 없는 소련 경제의 내적 필요성에 기인한다 할 수 있으나 이는 결과적으로 아시아지역에 있어서 평화정착의 가능성을 높이는 계기가 되었다고 볼 수 있다.⁴⁰⁾

고르바초프는 1989년 9월 16일 크라스노야르스크(Krasnoyarsk)에서 행한 연설에서 「쑤아시아 안보협력회의」(All-Asian Security

39) 일본동경이 노동1호의 사정권내에 있다는 데 대한 일본인들의 충격은 “日「북한 미사일 신드롬」”에 상술되어 있다. 「朝鮮日報」, 1993. 6. 16, p. 7.

40) Hiroshi Kimura, “Soviet Focus on the Pacific,” Problems of Communism, May~June 1987, pp. 7~12.

& Cooperation Conference)를 제안했다. 「크라스노야르스크 선언」을 통해 고르바초프는 보다 발전된 아·태지역 평화구축을 위한 7개항을 제안했다. 그 중 소련, 중국, 일본, 남북한의 해안선이 접하는 지역에서의 군사대립을 완하시키기 위해 군사력의 동결, 군비축소 등에 관한 다국협상개최 등이 포함되었고 아·태지역 안보에 관한 협의기구를 소련, 중국, 미국의 주도하에 발족시킬 것도 제안한 바 있다. 이는 1986년 7월 29일 「블라디보스톡 선언」에서 천명된 고르바초프의 對아시아 외교정책에 이은 소련의 아·태지역 진출을 위한 장기적인 布石의 일환으로 볼 수 있으며, 아·태지역에서 소련이 의도하는 정치·경제적 목표의 추구를 위해서는 긴장완화와 군비축소를 통한 군사적 안정이 필수적이라는 인식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同 연설에서는 한반도정세가 호전됨에 따라 소련과 한국간의 경제교류 가능성이 열렸다고 시사한 바 있다.⁴¹⁾

고르바초프는 그 외에도 1989년 5월 북경 연설을 통해 「全아시아적 과정」(All-Asian Process)을 제안한 바 있다. 북경연설의 특징은 집단안보협력체제의 필요성과 함께 그에 이르는 「全아시아적 과정」을 제기하였다는 점이다. 아·태지역에는 대화체제와 정기적인 다자간 협의기구(the mechanism of multi-consultation)가 不在하다고 전제하면서, 유엔의 협조와 지지하에 아시아의 모든 유관국가가 노력하여 문제해결을 하기 위한 「全

41) 북방정책연구소, “고르바초프의 크라스노야르스크 연설문,” 1988. 11; Novosti Press Agency, Press Release “Gorbachev Speech,” July 29, 1986.

아시아적 과정」을 모색할 시점에 와 있다고 주장하였다.

「쏘아시아적 과정」은 그동안 세계의 냉전 주도국이었던 미국과 소련이 참여한 아·태지역의 집단안보체제를 구축함으로써만이 지역의 평화와 협력이 가능하며 평화구축 과정에서도 미·소 양국이 배제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을 강조한 것이다.

이와 관련, 1990년 9월 10일 에드워드 세바르나제 외무장관은 「블라디보스톡 연설」을 통해 「범아시아포럼」(Pan-Asian Forum)을 제안하면서 아시아에서도 새로운 탈냉전시대를 개척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범아시아포럼」제안은 당시 한국, 캐나다, 호주 등 아시아 각국에서 대두되기 시작한 지역 내 안보협력 증진을 위한 국제적 포럼의 필요성과 무관하지 않다. 즉 1990년 8월 일본과 인도네시아가 「아·태지역 외무장관회의」를 제안하자 이에 대한 대응방안으로 제안했다고 볼 수도 있다. 「범아시아포럼」은 안보문제 뿐만이 아닌 경제협력, 환경보호, 과학기술 등 다양한 의제를 포괄하고 있으며, 이 지역에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미국을 비롯한 여러 국가들을 집단안보협력체제에 참여시킬 목적으로 시도되었다고 볼 수 있다.

물론 구소련이 아·태지역의 위기관리와 안보위협 제거 및 미국의 영향력 희석을 위해 여러가지 방안을 제안해 왔던 측면을 부정할 수 없다. 그러나 러시아는 여러가지 국내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아시아에서의 多者間 安保協力體 구성에 주도적 역할을 추구하거나 미국의 영향력을 상쇄시키려는 의도보다는 역내 국가들과의 공동관심사를 논의할 수 있는 계기로 활용하여 역

내국가들간의 긴장완화와 협력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의도가 더욱 강하다고 보여진다. 이러한 소련의 입장변화는 최근 샌디에고 「동북아협력회의」를 위한 준비회의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으며 미국의 입장과 배치된 제안을 하기 보다는 議題選定이나 參與의 幅에 대한 문제를 논의함에 있어서 전적으로 미국과 의견을 같이 할 정도로 다자간 안보대화 구성에 적극적인 지지를 보내고 있다.

1992년 11월 19일 엘친 대통령은 방한시 국회연설을 통해 아·태지역내 다자간 대화 메카니즘을 활용할 필요성을 강조했고 위기관리를 위한 「아·태지역 분쟁방지 센터」 설립 등을 제안한 바 있다. 이러한 엘친의 제안은 긍정적으로 고려해 볼 가치가 있다고 보여진다.

라. 中國

중국은 대내 경제건설을 위해 안정적 주변환경을 필요로 하는 만큼 주변국들과 선린외교를 강화함으로써 유사이래 가장 유리한 안보환경을 맞이하고 있다. 중국은 과거 적대관계에 있었던 러시아, 베트남, 인도 등과 관계를 정상화했고 한국과도 수교하였다. 또한 일본과도 江澤民과 아키히토의 상호방문을 교환하며 정치·경제적인 협력관계를 강화하고 있다. 중국은 이러한 선린외교에 전략적인 중요성(strategic importance)을 부여하고 있으며 중국 지도자들 역시 중국이 아·태지역의 평화를 보장하고 安定者(a stabilizing force)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데

높은 가치를 두고 있다.⁴²⁾ 중국은 아·태지역은 물론 세계의 평화와 안정이 국내정치 안정과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역내국가들에게 인식시키고자 노력하고 있다. 錢其琛외교부장은 최근 “중국은 안정을 원하며 세계는 중국의 안정을 필요로 하고 있다”고 주장했으며,⁴³⁾ 이는 중국내 인권문제 등을 이유로 한 미국 등 서방의 對中압력에 대해 자세를 요구하기 위한 것이었음을 알 수 있다.

중국의 외교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인권 및 민주화문제에 대한 미국의회로부터의 압력, 일본의 정치군사대국화 움직임, 러시아 정국의 혼란에 따른 중국내 소수민족 분리독립 요구가능성, 南沙群島 영유권을 둘러싼 동남아 국가들과의 갈등 및 북한 핵문제 등은 여전히 중국의 안보에 직간접적인 위협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비록 구소련의 붕괴와 미·러관계의 개선으로 인하여 자국의 戰略的 價値가 예전에 비해 감소되긴 했지만 중국은 아·태지역의 분쟁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최근 아·태지역이나 동북아지역에서 위기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다자간 안보협력의 필요성에 관한 논의가 시작되면서 중국의 입장도 점차 변화를 보이기 시작했음은 주목할만하

42) Xu Xin, “Changing Chinese Security perceptions,” *NPCSD Working Paper*, Number 27, York University, Toronto, 1993, p. 14.

43) 「人民日報」, 1990. 10. 6, p. 6.

다. 과거 중국은 지역안보협력기구의 창설 주장을 中國包圍戰略의 일환으로 간주하여 반대해 왔다. 또한 중국은 동북아의 복잡한 영토문제와 분단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안보협의 체구성은 어렵다고 인식했기 때문에 신뢰구축을 통한 긴장완화가 선행된 이후 안보협의를 점진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다.⁴⁴⁾ 즉 중국은 자신의 이해가 걸려있는 지역문제가 국제화되기 보다는 관련 당사국간 협의에 의해서 해결되는 것이 자국의 이익에 더욱 부합된다고 판단하였다.

중국은 동북아지역의 특수한 사정을 고려할 때, 현단계에서는 CSCE와 같은 형태의 포괄적인 협의체가 형성되기 어렵다고 이해하고 있으며, 동북아지역의 집단안보체제가 형성될 경우 중국을 假想敵으로 다룰 가능성에 대해 우려하였다.⁴⁵⁾ 이러한 시각에서 볼 때 집단안보체제에 참여하는 것은 결국 중국의 영향력 약화를 초래할 것이라고 보았으며 또한 역내에서 중국이 배제된 어떠한 다자간 안보협의체 구성에도 반대해 왔다.

그러나 냉전이후시대 중국은 자국의 군사력 증대에 대한 주변국들의 우려를 불식시켜야 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⁴⁶⁾ 또한 지역분쟁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주변국가들의 다변적인

44) Li Luyue, "Current Situation in Northeast Asia," *Beijing Review*, August 19~25, 1991, p. 8.

45) 「大公報」(香港), 1992. 8. 18; 張雅君, "九0年代中共의 亞太戰略," 「中國 大陸研究」, 第 35卷 第11期(1992. 11), pp. 22~23.

46) 중국의 지도부는 최근 거론되고 있는 중국의 위협 (China threat)은 잘못된 인식에 지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Wang Jisi, "East Asia: Prospects for Cooperation," *Beijing Review*, July 19~25, 1993, p. 10.

협력추세에 더이상 좌시할 수 없는 입장에 서게 되었다. 특히 일본의 역할증대 가능성을 견제할 수 있다는 장점과 함께 역내 분쟁을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라면 다자간 안보협력 기구의 구성이 반드시 중국의 이해에 배치된다고 볼 수 없다는 인식을 갖게 되었다. 특히 중국은 최근 「리우환경회의」 등 세계문제 해결을 위한 포럼에 적극 참여하고 있고, 캄보디아의 평화정착을 위해 PKO공병대를 파견하는 등 국제사회의 노력에 적극 협력하고 있다.

이와 관련, 중국은 금년 5월 錢其琛의 서울 및 동경방문시 ASEAN 주도의 다자간 대화를 지지한다는 공식적 입장을 처음으로 표명한 바 있다. 그러나 중국은 다자간 안보협의체가 특정국을 대상으로 해서는 안되며 평화공존 5개원칙을 기초로 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⁴⁷⁾ 요컨대, 주변정세 안정을 바라는 중국은 지역 다자간 안보협의를 통해 지역불안 요인을 제거해야 한다는 당위성에 동감하면서도 이러한 협의체의 구성이 중국이나 북한에 대한 견제를 목적으로 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사실 중국은 다자간 안보협력이 중국외교가 지향하는 평화공존 5개원칙들과 배치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있으나,⁴⁸⁾ 최근 샌디에고 회의에 참가했던 중국대표의 입장에서 지적된 것처럼, 인권문제의 거론이나 민주화 등 내정간섭에 대해서는 매우 강경한 반대입장을 취하고 있다.

47) 「人民日報」, 1993. 2. 3.

48) 「人民日報」, 1993. 2. 3.

현재 중국의 입장은 다자간 협의체는 시기상조이나 협의를 위한 대화는 지지한다는 것이다. 중국이 현재 ASEAN-PMC 주도의 대화를 선호하고 있는 가장 큰 원인은 역시 인권문제에 관해서 ASEAN과 공통된 시각을 갖고 있다는 점일 것이다. 또한 미국의 독주와 일본의 패권추구 가능성을 牽制할 수 있다는 인식 역시 긍정적으로 작용했을 것이다.

마. 韓國

노태우 대통령은 1988년 10월 18일 유엔총회연설을 통해 「동북아 평화협의회의」의 창설을 주장했다.⁴⁹⁾ 노대통령은 당시 남북한과 미·일·중·소가 참여하는 「동북아6개국 평화협의회의」를 제창했다. 노대통령의 제안은 구체적으로 동북아에서의 미·소 대립완화, 한반도 문제해결, 일·소간의 영토분쟁해결, 중·소간의 화해, 한국의 對중·소 관계개선, 북한의 對미·일·관계개선 등 안보에 관한 포괄적인 의제를 6개국회의 형식을 통해 논의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 즉 동북아 및 태평양지역에서의 안정, 평화, 협력의 制度化 를 위해서는 21세기의 태평양시대에 대비하는 다자간 협의체가 필요하다는 것이었다.

이러한 「동북아 평화협의회의」 제안 배경은 서울올림픽의 주최, 북방정책의 추진 등으로 냉전체제에 입각한 종래의 한반도 주변 정세가 변화하리라는 기대와, 국제정세의 전반적인 호조

49) 노태우 대통령의 UN총회연설: “한반도에 화해와 통일을 여는 길,” 1991. 10. 18. 통일원, 「통일백서」(서울: 통일원, 1991), pp. 66~69, pp. 86~87.

로 과거 적대적이었던 중국 및 소련과도 대화와 교류가 가능해질 것이라는 기대감에 기인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당시 한국 정부의 판단으로는 소련이 이미 「크라스노야르스크 평화안」을 제안하는 등 다자간 협의에 적극 관심을 표명했고, 시베리아 개발을 축으로 한 對한국 자세 전환의 조짐을 보였으며, 중국도 경제개혁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해서 동북아협력이 현실적으로 필요할 것이라고 보았다. 일본 역시 경제력에 부응하는 국제적 역할을 모색하고 있었지만 지역협력에 선도적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상황을 타개할 수 있는 방법으로서 한반도문제를 비롯한 동북아 안보문제의 협의에 일본이 적극 참여할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반면, 미국은 지리적인 위치, 종래의 쌍무적 관계의 치중에서 오는 제약을 극복할 수 있는 새로운 구도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관심을 가질 것이라고 보았다. 따라서 이 회의가 창설되면 미국이 보다 적은 비용으로 태평양국가의 중심세력으로 계속 남을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했던 것이다. 경제적인 한계점에 직면한 북한으로서도 미국, 일본 등과의 관계개선의 기회로 삼을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한국의 입장을 결코 반대만 하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했던 것이다.

그러나 노태우대통령의 제안은 한반도문제의 國際化를 의도한 것이 아니며 기본적으로 한반도 문제는 南北韓 當事者間 직접해결을 원칙으로 하고 주변국은 어디까지나 그 여건을 조성하는데 협력하도록 해야 한다는 의도였다. 즉 남북한 문제는 동

북아 전체의 평화정착과 역내 관련국가들의 협력이 필수불가결한 조건이라는 인식을 바탕으로 해야만 한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당시의 동북아정세는 한·소, 한·중관계가 개선되기 이전이었으므로 노태우정부의 구상이 실현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러한 제안과 관련하여 미국은 태평양 지역내 소련군사력에 대한 불신 등으로 인해 유보적 태도를 견지했었고 여타 국가들로부터도 별다른 호응을 얻지 못했다.

노태우 대통령은 그 후 1992년 9월 22일 UN 47차 총회에 참석 “평화와 번영의 21세기를 위하여” 제하의 연설에서 4년전 자신이 제안한 「동북아 평화협회의」를 언급하며 비록 많은 난관들이 여전히 남아 있으나 그동안 한·중수교 등 이 지역내에서 괄목할 만한 안보환경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음을 강조했다. 노대통령은 동북아에서 상호 이해 및 신뢰의 증진과 번영을 위한 이해당사국들간의 「對話」(dialogue)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일단 상호간의 이해를 통한 협력의 場이 완성되면 동북아의 새로운 질서 창출이 현실적으로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⁵⁰⁾

이와 같은 다자간 지역안보대화의 필요성에 대한 한국의 입장은 김영삼정부에서 더욱 적극성을 띠고 전개되고 있다.

김영삼정부의 출범이후 신임 한승주 외무장관은 1993년 3월 15일 국회외무통일위 발언을 통해 한국이 향후 多者間 安保協力體 논의에 적극 참여할 것이며 동년 5월과 7월에 각각 열리

50) *Korea: A Nation Transformed* Vol. II. Selected Speeches of President Roh Tae Woo (Seoul: The Presidential Secretariat, 1993), p. 149.

는 지역안보문제에 관한 고위실무자회의(SOM)와 ASEAN-PMC에 정부대표를 파견할 것임을 밝혔다. 그는 현재 한국은 한반도문제 해결에 있어서 당사자 해결원칙을 강조하고 있으며 동북아 多者間 安保協力體의 구상이 기존의 한·미안보간 협력 체제를 손상시키지 않는 범위내에서 적극 대응한다는 입장을 표명함으로써 신행정부가 다자간 안보대화에 중점을 둘 것임을 시사했다.

이러한 입장은 김영삼 대통령의 1993년 5월 24일 「태평양경제협력회의」(PBEC) 총회연설에서 더욱 분명히 밝혀졌다. 김영삼 대통령은 「太平洋 時代와 韓國의 新外交」 제하의 기조연설을 발표하면서 태평양시대의 도래에 따라 아·태지역협력강화를 모색할 것이며 역내 다자간 안보대화에도 적극 대처한다는 입장을 제시했다. 그는 또한 지역안보대화가 장차 안보협력으로 발전할 가능성에 대비할 방침임을 밝힌 바 있다.⁵¹⁾

이러한 김대통령의 의지를 더욱 상세히 설명하는 의미에서 한승주 외무장관은 1993년 5월 31일 외교협회에서의 연설을 통해 「韓國 新外交의 5大基調」에 관해 부연 설명했다. 아·태지역 안보와 관련, 한장관은 이미 ASEAN-PMC를 통해 아·태지역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다자안보대화가 시작됐으며, 한국은 이러한 광역적 안보대화에 능동적으로 참여하고 발전을 도모할 방침임을 분명히 했다. 그러나 한장관은 이러한 안보대화가 군비

51) 김영삼, “태평양 시대와 한국의 「신외교」”(1993. 5. 24.), 제26차 태평양 경제협력회의(PBEC) 총회 연설문.

통제나 분쟁해결을 효과적으로 다루기 위해서는 광역차원의 안보협력체 구성 보다는 지역적 유사성이 있는 小地域單位로 추진될 때 가능하다고 주장하며 동북아에서 「소유럽안보협력회의」(mini-CSCE)형식의 안보협력체를 추진할 방침임을 밝혔다.

클린턴의 방한으로 구체화되기 시작한 동북아 안보협의체 구상은 7월 26일 6개국 다자간 안보대화의 개설을 위해 샌디에고에서 첫 준비회담을 가졌고 금년 10월 같은 장소에서 본회를 열기로 합의한 바 있다. 한국의 입장은 이러한 안보대화의 출범을 통해 구체적이고 可視的 성과를 성급히 기대하기 보다는 안보문제에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분야인 환경이나 해양문제 등으로부터 출발, 장기적으로 신뢰를 쌓아갈 裝置(tool)와 기제(mechanism)를 마련한다는 데 더욱 큰 의의를 두고 있는 것 같다. 그러나 이러한 대화가 실효를 거둘 경우, 한국은 다자간 대화를 통하여 북한을 장기적으로 태평양협력권에 통합시킬 수 있을 것이며 남북한관계의 개선에 있어서도 주도권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다.

3. 域外 關聯國들의 提案 및 立場

가. 캐나다

자국의 미래가 태평양권에 속해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 캐나다는 전통적인 다자간 업무의 경험을 바탕으로 지역내 안보움직임을 주도해 보고자 노력해왔다. 조 클락 당시 외무성 장관은

1990년 여름 북태평양에 대한 정치 및 경제적 이해를 증진시키기 위해 캐나다가 전통적으로 比較優位를 갖고 있는 다자간 협력문제에 대한 깊은 관심을 배경으로, 이 지역내 팽배한 군사화 추세와 강대국들간의 이해경쟁, 그리고 지역세력들간의 대립양상에 우려를 표명한 바 있다. 그는 지역내 긴장완화와 透明性 제고 및 군사적 충돌을 미연에 방지 할 수 있는 制度的 裝置가 결여(institutional vacuum)되어 있음에 착안, 지역내 모든 이해 당사국들이 참여하여 대화와 협력을 習慣化할(habit of dialogue)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였다.⁵²⁾ 이러한 관심은 1990년 가을 캐나다가 주도하는 「북태평양안보대화」(North Pacific Cooperative Security Dialogue: NPCSD)로 발전, 각 정부 관리들과 학계 등 비정부 대표들이 참여하는 대화체제로 발전, 금년 3월 밴쿠버에서 열린 회의를 마지막으로 막을 내리기까지 다자간 안보대화의 문제점과 필요성에 대한 참여국간의 공감대를 형성시켜 왔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당시 다자간 협력에 대한 미국으로부터의 냉담한 반응을 의식한 캐나다는 「북태평양안보대화」의 개념이 미국이나 일본이 유지하고 있는 기존 쌍무동맹체제에 대한 약화를 의미하지 않음을 강조했고 해군군축과 같은 민감한 사안 등을 다루지 않을 것임을 밝혔다. 또한 다자간 형태의 협의기구가 신뢰회복에 유리한 점을 충분히 인식하면서도 CSCE와 같은 制度的 裝置를 이 지역에 곧바로 移植하자는 주장은 하지 않았다.

52) Joe Clark cited in *Pacific Research*(August 1990), p. 21.

캐나다는 자국이 명실상부한 태평양국가임을 자부하면서 결코 아·태지역의 안보문제를 다룸에 있어서 域外국가로 취급받기를 원치 않았다. 캐나다는 다자간 안보대화의 구성을 통해 무기의 확산이나 거래, 남지나해상의 해상영토에 관한 분쟁 가능성, 북한의 핵개발문제 등 안보에 대한 전통적 위협과 이민(migration), 마약거래, 환경문제 등에 따른 非軍事的 威脅(unconventional threats)도 다루길 원했다. 특히 맥두갈 외무장관은 국내정치의 억압 및 불안정이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강조하면서 인권문제, 민주화 등의 기준은 범세계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원칙을 갖고 적용되어야 하며, 이러한 원칙이 아·태지역내 국제관계의 근간이 되어야 한다는 도덕적인 입장을 강조해 왔다.⁵³⁾

캐나다는 다자간 안보협력을 추진함에 있어서 비정부간 대화와 정부간 접촉등 두가지 방법(Two track)을 통해 접근해 왔고 현재 이러한 방식의 대표적인 예로 가장 활기있게 진행되고 있는 안보협력협의체는 한국의 서울포럼과 말레이시아의 국제전략연구소(ISIS), 그리고 미국의 CSIS-Forum 등이 주관, 금년 6월 구성을 결정한 「아·태안보협력위원회」(Council for Security Cooperation in Asia Pacific:CSCAP)이다.

캐나다의 「북태평양안보대화」에 대한 역내국가들의 반응도

53) Barbara McDougall, "Canada and the Pacific Century," an address to the joint luncheon of the Vancouver Board of Trade and the Asia-Pacific Foundation. Vancouver, British Columbia, February 19, 1993.

미·소간의 핵무기 감축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는 등 냉전종식에 따른 전반적인 안보환경의 변화가 아시아지역에까지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점차 달라졌고, 결국 캐나다의 노력은 아·태지역에서 안보협력체 구성에 대한 관심과 다자간 협의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하게 만드는 데 크게 기여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현재 진행중인 ASEAN-PMC나 고위실무자회의(SOM)는 「북태평양안보대화」에서 제안했던 모델들이 구체화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비록 캐나다정부가 현재 추진중인 6개국간의 동북아 안보협력기구에 포함되지는 못했지만 議題開發이나 制度化的 수준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3년여에 걸친 「북태평양안보대화」의 경험은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 캐나다는 현재 「아·태안보를 위한 캐나다 콘소시움」(Canadian Consortium for Asia Pacific Security: CANCAPS)을 설립, 캐나다내 아·태지역안보를 연구하는 각종 연구소 및 연구활동을 조정하고 지원할 계획이다.

나. 濠洲

호주는 중급국가로서 역내 발언권 증대를 희망하여 지역안보협력에 적극적 입장을 보이고 있다. 호주는 이미 1990년 7월 게리스 에반스 당시 외무성 장관이 CSCE 아시아관을 만들자는 제안을 했으나 미국은 해양력의 우세에 기초를 둔 아·태지역에서의 미국의 입장을 어렵게 만들 가능성을 우려하여 비판적인 반응을 보였다. 베이커 미국무장관은 동년 11월 에반스장관에

게 보낸 서신을 통해 호주의 제안철회를 요구했다고 한다.

이와 관련 당시 학계의 많은 논문들이 아시아에서 유럽식 안보회의의 실현이 어려운 이유를 설명했고 에반스장관의 주장에 대한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그러나 에반스장관은 “CSCE의 과정이 그대로 아·태지역에 적용될 수 있다고 믿을 만큼 순진한 사람은 없다. 그러나 제도적인 과정(institutional process)이 지구 반대쪽에 移植될 수 없다고 해서 마음의 습관(habit of minds)마저 이식될 수 없다고 말할 수는 없는 것이다”라고 반박했다.⁵⁴⁾

1991년 5월 당시 호크 호주수상은 연설을 통해 “새로운 지역 안보포럼이나 안보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기구를 설치하는 것이 적절하다거나 필요하다고 보지 않으며 이러한 포럼이나 기구들이 유익한 역할을 하리라고 말하기에는 이르다. 특히 유럽의 새로운 안보구조를 아·태지역에 이식시킬 수 없다는 점을 인식해야만 한다”라고 말하며 호주의 공식입장을 대변했다.⁵⁵⁾

호주는 1991년 5월 호크수상의 이러한 발언이후 가급적 「아·태안보협력회의」(Conference on Security and Cooperation in Asia: CSCA, 이하 CSCA로 표기)의 제안을 자제하고, 좀 더 지역적인 접근이나 양자간의 안보관계를 강조하는 방향으로 급선회했다.

54) Gareth Evans, “The Asia Pacific and Global Change,” address to the Trilateral Commission, Tokyo, April 20, 1991, p. 6.

55) R. J. Hawke, “Australia’s Security in Asia,” The Asia-Australia institute, Sydney, May 24, 1991, p. 10.

그러나 ASEAN-PMC가 공식 출범한 이후 현재 호주는 ASEAN-PMC의 지역안보대화 논의를 지지하고 있으며, 1991년 5월 24일 호크수상은 신뢰증진 및 안보협력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으로 지역안전을 위한 해양정찰레짐(A Regional Maritime Surveillance for Safety Regime: REMARSSAR) 및 남서 태평양에서의 해양정찰 및 지역해양정찰연락체계(Regional Maritime Surveillance Communication Network), 영공정찰레짐 (Air-Space Surveillance Regime), 정보교환레짐(Intelligence Exchange Regime) 등의 구성이 가능할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또한 1992년 ASEAN-PMC에 참석한 에반스 외무장관은 신뢰 및 안보구축방안으로 해적퇴치를 위한 해상정보의 교환이나 지역안보 논의에 대한 계획수립, 지역무기등록(Regional Arms Register)도 논의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⁵⁶⁾ 그러나 해적퇴치를 위한 정보의 교환은 전통적 의미의 안보범주에 속하지 않는 것이며 지역안보대화에 대한 논의도 대화의 지속적인 가능성만 열어 놓은 것에 불과하고, 역내무기등록 역시 말레이시아에서 이미 제안한 내용으로 새로운 것이 없었다. 따라서 호주는 군비통제기능과 常設機構를 수반하는 CSCA의 거대한 제안으로부터 탈피, 다자간 안보협력에 매우 신중하면서도 부분적인 기능만을 제공하겠다는 소극적인 전략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호주는 북한 핵문제 해결방향에 대한 참여한 관심을 갖

56) Steve Burrell, "Security Dominates ASEAN Concerns," *Financial Review*, July 27, 1992.

고 있으며 이를 북한과의 외교관계 재개에 대한 중요한 기준으로 간주하고 있다. 동북아 6개국 다자간안보대화에 대한 호주의 공식 입장은 아직 발표된 바 없으나 위기의 안정적 관리라는 측면에서 다자간 안보대화의 성립에 지지를 보낼 것으로 보이며 현재 진행중인 한국, 캐나다, 미국 및 일본 등과의 실무접촉을 통해 안보협력에 대한 논의를 계속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다. 아세안(ASEAN)

아세안주도의 안보대화는 현시점에서 아·태지역내 유일하게 실천단계에 도달해 있는 정부간의 정기적 채널이며, 인권, 환경, 민주화 등 다루는 주제에 있어서도 포괄적인 안보에 관한 협의를 다양하게 논의하는 비제도화된 방안이다. 아세안 6개국은 1992년 1월 싱가포르에서 개최된 제4차 아세안 정상회담에서 ASEAN-PMC를 이용, 정치·안보문제에 관한 참가국간의 대화를 촉진한다는 입장을 결정하였고, 1992년 7월 마닐라에서 열린 ASEAN-PMC에서 위의 대화를 출범시켰다. 그러나 동남아 국가연합이 관심을 갖고 있는 방안은 ASEAN-PMC를 활용하는 방안 뿐만은 아니며 현재 비정부채널을 통한 다각적인 방안들이 추진되고 있다.

ASEAN-PMC에 참여하고 있는 대부분의 국가들은 아·태지역의 안보에 대한 불확실성을 타개하기 위해 多者間 安保協力體 구성이 필요하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 했으나 구성원과 내용, 절차 및 의제에 관해서는 아직 완전한 합의를 이루지 못하

고 있다. 현재 정례적으로 개최되고 있는 「지역안보대화」는 점차 참가국의 영역을 넓혀 가고 있으며 아직 常設機構를 둔다거나 정상회담을 도입할 계획은 없으며 내년 방콕회의에서는 「아세안 지역안보포럼」으로 발전시켜 나아가기로 합의했다. 아세안이 오랜 전통을 깨고 이렇게 多者間 安保協力體 구성에 적극성을 보이는 이유에 관해 한승주 교수는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⁵⁷⁾

첫째, 아·태지역에서의 안보협력체 구성을 검토하는데 있어서 아세안의 주도권 내지는 리더쉽을 장악하려는데 있다.

둘째, 중국, 러시아, 베트남, 그리고 어느 단계에서는 북한까지 안보협약에 관한 논의에 참가시켜 아시아에서의 미국의 군사적 역할축소에 공동대응하고 지역내 모든 나라들이 안보논의에 참여하는 것을 장려하기 위한 것이다.

셋째, 어느 단계에서 아세안 안보협력체가 구성될 것에 대비, 미·일·러·중 등 강대국과 캐나다, 호주, 한국 등에 미리 양해를 구하기 위해서라고 볼 수 있다.

넷째, 일본의 증대하는 정치·군사적 역할을 검토하고 공동대응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라고 볼 수 있다.

현재 추진중인 「동북아 6개국 안보대화」를 바라보는 아세안의 입장은 분쟁발생지역인 한반도를 중심으로 한 동북아 小地域 안보대화가 미국과 한국의 주도로 구성되는 것이 불가피하

57) 한승주, “아세안과 동아시아의 지역안보,” 「동남아시아연구」 창간호 (1992), p. 13.

다는 점을 충분히 인정하면서도 아·태지역내의 안보협력이 자신들의 주도에 의한 「아세안지역포럼」(AFR)과 더불어 二元化되고 있는 추세에 대해 우려를 금하기 어려울 것이다. 장기적으로 두개의 협력체간에 連繫體系를 갖출 수 있는 방안을 개발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

이상 다자간 안보협력에 대한 역내외 관련국의 입장을 비교해 보면 아래 <표 3-3>과 같다.

<표 3-3> 지역협력에 대한 각국의 입장비교

제안국	多者間 유형	참 여 범 위	의 제	制度化 과정
미국(클린턴)	안보협력체/ 안보대화	아·태광역 및 동북아 6개국	지역분쟁문제	정부/비정부
일 본	안보대화	아·태광역 및 동북아	포괄적 의제 (양자간의제 제외)	정부/비정부
러시아(엘친)	지역안보공동체	아·태광역 및 동북아	포괄적 의제	정부
한국(김영삼)	안보협력체/ 안보대화	아·태광역 및 동북아	비정치군사적인 이슈/초보적CSBM/ 포괄적의제	정부/비정부
캐나다 (멀러니)	안보대화	북태평양 (동남아 포함)	비군사이슈 (인권·민주화 포함)	비정부
호주(호크) 1991.5.24이후 (CSCA에서 후퇴)	안보대화	아·태광역	초보적인 CSBM	정부
아세안 (93년 현재)	안보포럼	아·태광역	비군사적인 이슈 초보적 CSBM (인권·민주화 제외)	정부

第Ⅳ章 東北亞 多者間 安保協力體 發展 展望

1. 制約要因 및 促進要因

한승주 외무장관은 1993년 7월 12일 미국 클린턴 대통령의 방한과 「신태평양공동체선언」을 계기로 동북아지역의 다자간 안보대화를 위해 안보협의회를 구성하기로 합의했음을 밝혔다. 이와 관련 한국은 김영기 외무부 제2심의관을 대표로 하는 2명의 대표단을 미국 San Diego에서 1993년 7월 26~27일間に 열린 「동북아협력회의」 준비회의에 보냈으며 금년 10월 미국에서 개최될 제1차 「동북아협력회의」 본회의에도 참가할 예정이다. 그러나 현재 동북아에서 추진중인 안보대화가 장차 신뢰구축문제를 다룰 수 있는 안보협력체로 발전할 것인지 검증할 필요가 있다.

가. 制約要因

「동북아 안보협력회의」가 대화수준을 넘어 실질적인 안보협력을 논의할 수 있도록 발전하기에는 여전히 많은 障礙要因들이 있으며, 이러한 문제점들의 극복여부가 동북아 다자간 안보협력의 성사를 좌우할 것이다.

첫째, 기초적 신뢰결여 및 역내국가간의 수교상태 부재는 다자간 협상의 가장 근본적인 어려움으로 남아 있다. 즉 다자간 안보협력을 추진함에 있어서 그 하부구조를 구성하고 있는 역내 일부국가들간의 쌍무관계가 여전히 취약하다는 약점이 있

다. 특히 북한의 對美 및 對日관계가 핵문제 등으로 관계개선의 실마리를 찾기 어려운 실정이며 무엇보다도 현 북한지도자층의 폐쇄적인 속성은 북한정치체제에 대한 서구의 의심을 불식하기 어렵게 만들고 있다. 이러한 기본적 신뢰의 부족은 다자간 안보협의체 구성을 북한에 대한 牽制機能 위주로 만들 수 있고, 결국 북한의 참여를 어렵게 만들 우려가 있다.

둘째, 쌍무적 기본관계의 약화에 대한 우려는 미국과 일본이 다자간 협력의 필요성에 반대해 왔던 가장 중요한 이유였다. 한국정부 역시 한·미 안보협력을 代替하는 개념으로서는 다자간 안보협력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최근 동북아6개국 안보협의체 구성움직임에 대해 대부분의 국가들은 다자간 안보대화가 기존 쌍무동맹이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들에 대한 補完的 機能을 수행할 것이라는 희망을 갖고 있지만 기본적인 양자관계가 우선시 되고 있는 상황에서 다자간 안보협력이 制度化되는데 어려운 점이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로 북한이 「동북아협력회의」 준비회의에서 다자간 안보협력에 장애요인이 될 수 있는 기존의 쌍무동맹들을 철회할 것을 강력히 주장하기 시작했다는 점은 매우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

셋째, 동북아 국가들간에 동질적 가치의 결여는 정치적인 신뢰구축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 즉 역사적 반목과 이해의 상충은 다자간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게 되는 원인을 제공하는 동시에 이의 성공여부를 不透明하게 만드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 되

고 있는 것이다. 오랜 민족감정과 연루된 한·일 또는 중·일간의 문제점들은 안보협력에 부정적인 요인들로 작용하고 있다. 또한 현재 첨예하게 대립되어 있는 일·러시아간 북방도서문제도 다자간안보협력기구가 구성된다고 해도 의제로 채택되기 어려운 사안들인 것이다. 또한 중국이나 북한의 경우 인권문제나 국내정치발전에 관련된 문제가 연계될 때 이에 대한 명백한 반대 의지를 표명할 것이다. 특히 미국과 중국간에 최혜국대우 연장을 놓고 갈등관계를 노출시켜 온 경험을 상기할 때 현재로서 매우 제한적인 협력이상을 기대하기 어렵다.

넷째, 制度化에 따르는 기구유지나 비용문제도 장차 장애요인이 될 수 있다. 신뢰구축조치의 일환으로 군비통제나 무기 및 군병력감축 등을 시도하게 될 경우 예상되는 비용문제와 무기 수출의 감소에 따른 國內産業構造 再調整 問題, 실업문제 등 해결하기 어려운 과제들이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기본적으로 모든 당사국들이 만족할 수 있는 해안을 찾기란 쉽지 않을 것이다.

다섯째, 북한의 참여 반대와 계속되는 핵위협을 들 수 있다. 북한은 동북아 다자간안보대화가 개방압력으로 이어질 것을 매우 우려하고 있으며 최근까지 영토문제 등 역내 모든 현안이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동북아 다자간안보대화의 구성에 반대한다는 입장이었다. 북한은 1991년 1월 13일에도 외교부 담화를 통해 「전아시아 안보협력기구」의 창설에 반대한 바 있다. 최근 노동신문의 논설을 통해 “「전아세아안보협조회의」가 창설

된다는 것은 곧 이지역에서 구라파의 나토(NATO)와 같은 반공, 반사회주의 침략동맹이 출현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지적하며 이는 미제가 다국적관계를 축으로 하여 동북아지역을 포괄하는 支配主義體制를 창설하려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고 주장했다.⁵⁸⁾ 또한 다자간 안보대화를 구성하게 되면 아시아 사회주의 나라들에 새로운 집단적인 위협이 가해지게 되며 이는 사회주의를 말살하려는 미제의 음흉한 책동이라고 비난했다.

그러나 북한은 지난 7월 26~27일 미국 캘리포니아 대학 샌디에고 분교에서 개최된 「동북아협력회의」를 위한 준비회의에 김종수 유엔주재 부대사와 동경철 2등서기관을 파견, 전세계에서 유일하게 냉전지역으로 남아있는 동북아지역의 군사적 대결을 방지하고 긴장해소를 위해 「동북아협력회의」 구성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북한의 김종수 부대사는 한반도 안정과 신뢰구축조치의 일환으로 한·미간에 진행되고 있는 팀스피리트 군사훈련의 영구폐지를 요구했고 양자동맹의 불필요함을 강조했다. 또한 북한측은 기존에 주장해온 10만명의 군감축안을 재차 들고 나옴으로써 다자간 안보대화를 통해 자신들의 정치적인 입지를 강화시키고 또 외교공세를 취할 수 있는 계기로 활용하고자 하는 모습이 역력했다. 만약 북한이 이러한 자세를 견지한다면 현재 논의되고 있는 「동북아협력회의」 구성에 커다란 障礙要因으로 작

58) 「로동신문」 1993. 3. 10.

용할 것이다.

나. 促進要因

그러나 이러한 장애요인에도 불구하고 동북아에서는 미래지향적인 차원에서의 안보협력을 필요로 하는 움직임들이 나타나고 있다.

첫째, ASEAN-PMC의 안보의제 채택이후 참가국의 범위가 점차 확대되고 있으며 현재 대화파트너인 한국, 미국, 일본, 호주 같은 우방국들 이외에도 중국과 러시아, 라오스와 베트남 등이 금년 싱가포르 회담에 최초로 초청되었다. 따라서 범위의 廣域化는 피할 수 없는 추세이며 한국 역시 이러한 지역안보포럼에 적극 동참할 것임을 밝힌 바 있다. 다만 동아시아에서의 地域主義의 대두를 감안할 때 동북아의 특성을 고려한 별개의 다자간 안보대화 채널을 보유하는 것이 아·태지역 전반의 안보협력 추세에 어긋난다고 볼 수 없으며 오히려 相互補完의 측면이 있다고 할 수 있다. 한국이 동북아국가 위주의 小地域對話모임을 새롭게 결성할 것을 결정한 이상 「아세안 지역포럼」과의 향후 관계설정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도 동북아에서 유사한 수준의 안보협력체로 발전시킬 수 있는 방도를 강구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특히, 아세안중심의 광역적인 안보협력의 성공적인 시도는 包括的 安保概念에 대한 인식의 폭을 확대시키는 데 기여했으며 이를 통해 「협력안보」(Cooperative Security)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점차 동북아지역내 국가들에게 擴散되고

있음은 매우 중요한 발전이다.

둘째, 한반도문제의 國際化 趨勢 또한 이 지역내의 소지역대 화모임의 필요성을 증대시키고 있는 促進要因이 되고 있다. 1993년 3월 12일 북한이 핵확산금지조약(NPT) 탈퇴를 선언한 이후 주변강대국들과 한국정부는 북한의 핵문제가 지역안정을 위협하는 최대의 懸案이라는데 인식을 같이했고 북한의 탈퇴선언을 번복시킬수 있도록 외교적 노력을 경주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협조과정에서 북한의 공격적이며 우발적인 행동을 사전에 방지해야 할 制度的 裝置의 필요성에 대한 관련국들의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어 새로운 안보협력기구의 탄생가능성은 매우 높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셋째, 「동북아협력회의」를 구성하기로 합의한 미국의 결정은 미국이 탈냉전시대에 있어서 냉전시대와 같은 재정적인 부담을 안고 안보보장자로서의 역할을 고수할 수 없다는 현실적 인식에 바탕한 것이다. 또한 러시아의 퇴조와 함께 미국의 상대적인 역할축소가 불리일으킬 수 있는 勢力空白(power vacuum)과 지역불안상황을 야기해서는 안된다는 전략적 계산에 기인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넷째, 經濟的 地域主義(Regionalism)의 擴散과 經驗은 아·태지역에서 새로운 안보협의기구가 탄생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밑거름이 되고 있다. 문제는 별도의 安保全擔機構가 필요한가 아니면 기존의 제도에 安保機能을 添加시키는가 하는 方法論上的 問題가 대두될 뿐이다. 물론 기존의 APEC과 같은 경제협력기

구가 안보문제를 다룰 경우 어렵게 이루어 놓은 기반이 붕괴될 위험을 지적하는 우려론도 없지 않으나 장기적인 측면에서 APEC에서의 안보문제의 협의도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2. 主要 懸案

다자간 안보대화를 구성함에 있어서 중요시되는 현안들은 결국 누가 참여할 것인가, 무슨 의제를 다룰 것인가, 그리고 어느 정도의 수준으로 협의체를 출범시킬 것인가 하는 문제들이다.

가. 參加國의 範圍問題

현재 정부는 금년 10월 샌디에고에서 개최예정인 「동북아협력회의」를 위한 본회의에 참석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남·북한·미·일·중·러 등 동북아시아 6개국이 포함되는 小地域間 多者間 對話를 공식적으로 출범시키고자 하고 있다. 따라서 본절에서는 과연 동북아안보대화를 6개국에만 국한시키는 것이 가장 최선의 방법인지 아니면 추후 대만, 몽골, 캐나다, 호주 등 아·태 지역 국가들에게도 門戶를 개방할 수 있는 것인지,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ASEAN-PMC와 연계시켜 쏘아·태지역을 포함시키는 경우까지도 고려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 논의해 보고자 한다.

첫째, 동북아 6개국만의 대화체제를 가정할 때 이는 가장 현실적이며, 한반도문제에 관한 주요 이해당사국들만의 모임이란 점에서 문제해결에 효과적일 수 있다. 특히 한국의 입장으로서는

는 남북한간의 합의와 주변4강의 국제보장을 확보하는 외교적인 장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기존에 누차 제기되었던 「2+4의 개념」과는 차별성을 둘 필요는 있다. 즉 한반도문제 해결에 있어서 남북한간의 당사자 해결의 원칙을 기본적으로 중시해야 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 남북한간의 접촉에 이어 휴전협정 당사자인 미국과 중국이 먼저 참여하고 마지막으로 일본과 러시아가 후원하는 단계적인 「2+2+2」의 제안도 代案으로서 고려할 가치가 있다.

둘째, 만약 「동북아협력회의」가 장기적으로 동북아의 군비통제실현을 목표로 한다면 대만, 몽골, 캐나다, 호주를 포함시키는 문제도 고려해 보아야 할 것이다. 호주나 캐나다는 북한의 핵위협이나 노동1호 및 3호의 미사일 사정권(1000~1500km)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지 않는 나라들이지만 이들 역시 동북아에 있어서 핵위협과 군비경쟁의 도래에 결코 무관할 수 없는 나라들이다. 특히 캐나다는 동북아지역에서 다자간 안보대화 창설의 필요성을 역설해왔고 군비통제분야에 있어서도 많은 경험을 축적하고 있다는 점이 고려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한반도를 중심으로 장차 비핵지대화의 개념을 도입하여, 확대 적용시킬 수 있다면 몽골, 중국, 러시아 동북부, 일본 및 대만 등 동북아 대다수가 이러한 범위에 포함될 것이며 호주와 캐나다의 경우는 비록 域外國家이긴 하나 검증에 대한 축적된 경험을 활용하고 기술지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⁵⁹⁾

59) John Endicott. "International Conflict and Collective Security: Limitations and

이와 같이 참가국을 10개국이상으로 확대시키는 경우, 장기적으로 4강간의 이해대립이나 특정국가의 영향력을 배제시키는데 좀 더 유리할 수 있다. 그러나 역외국가들을 포함시키는 경우는 다자간 안보대화가 신뢰안보구축조치의 시행을 시도할 경우에 한해 假想해 볼 수 있을 것이다. 현재로서는 6개국이상으로 확대시키는 방안은 동북아 소지역만이 가질 수 있는 특수성에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는 점에서 불리하다. 특히 현재 ASEAN-PMC방안이 동북아를 포함시키는 방향으로 영역을 점차 확대하고 있는 상황임을 고려할 때, 한국이나 미국이 동북아에서 주도권을 잃지 않기 위해 현 시점에서 참가국 범위를 확대시킬 필요는 없다고 판단된다.

셋째, 동북아와 동남아를 연결하는 소위 「아·태안보협력회의」(CSCA)가 형성되기 위해서는 많은 세월과 노력이 필요하겠지만 이러한 가능성은 항상 열어 놓아야 할 것이며 동북아지역과의 이해가 중복되는 지역이나 이슈는 상호 유기적인 관계속에서 해결해 나아가야 할 것이다. 또한 이러한 가능성을 제고시키기위해 域外 대화 파트너로 ASEAN의 대표가 참석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Prospects," paper prepared for International Conference on "The New World Order and Korea: Challenges and Prospects Towards the Year 2000" by the Korean Association of International Studies(August 26, 1993). 앤디코트 교수가 주장하는 동북아에서의 제한된 비핵지대화의 개념은 몽고, 미, 중, 러, 남·북한, 대만, 일본을 포함한 8개국이다.

나. 議題問題

의제문제는 첫째, 전통적인 안보위협을 우선적으로 해결하려는 접근방법으로 핵확산금지, 군비통제실시, 무기 및 미사일 수출통제장치 설치, 군사정보의 透明性, 전환(Conversion)레짐의 설치 등이 구체적인 의제로 논의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신뢰구축을 위한 준비과정으로 비군사적인 측면에서부터 작은 협력을 통해 단계적으로 출발시키고자 하는 접근법을 가정할 수 있을 것이다. 즉 包括的 安保概念에 합당한 난민문제, 테러방지문제, 마약문제, 환경보전 및 오염방지, 해상안전감시 및 해적 퇴치, 영유권 중재문제 등이 논의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인권문제 등과 같은 문제는 비군사적인 문제의 영역이지만 그 성격상 내정간섭이라는 비난을 받을 우려가 있어 다자간 대화의 의제로 다루기에는 매우 조심스러운 부문이다.

문제는 다자간 신뢰구축의 경험이 전무한 동북아지역에서는 동남아지역이나 여타지역과 달리 비정치적인 의제를 다루는 대화의 개시가 機能的 接近을 통해 정치적인 신뢰로 擴散(spill-over)될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점이다. 따라서 동북아지역에서는 비정치적인 대화를 개시함과 동시에 지역안전보장에 보다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북한 핵문제나 미사일문제 등 군비통제문제도 동시에 논의해야 바람직할 것이다.

그러나 대화 자체를 시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현상 상황에서 참여국중 어느 한 국가라도 반대하는 의제를 다루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이는 「동북아협력회의」를 준비하기 위해 모인 샌디에

고회의에서 증명되었으며 대화 개설을 위해 역내 안보상황에 대한 대화와 비정치·비군사적인 의제만을 다룬다는 방침을 정하였다. 따라서 참가국들이 원치 않는 민감한 의제들은 모두 제외시키기로 결정했던 것이다. 이와 관련, 아·태지역에서 거론되고 있는 기초적 신뢰안보구축조치의 일환인 지역 무기등록(Regional Arms Register)이나 국방백서(White Paper)의 발간, 군사정보교환, 지역안전을 위한 해상정찰레짐(A Regional Maritime Surveillance of Safety Regime: REMARSSAR) 설치 등의 의제들이 「동북아협력회의」에서 조속히 실현되기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

다. 制度化 問題

현재 「동북아협력회의」창설을 추진하고 있는 한국과 미국은 대화를 習慣化하고 定例化하는 방안, 기존제도를 활용하는 방안, 그리고 새로운 기구나 제도를 구성하는 방안 등 다각적인 방향에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물론 신뢰구축의 분위기를 조성한다는 점에서 정부간의 대화보다는 비정부간의 접촉, 즉 학계나 기타 연구소등을 중심으로 신뢰구축의 실험과 과정을 통해 점차 협력을 증진시키는 방법이다. 다자간 협력이 실제로 해상조난구조나 오염문제 등 비정치적이며 군사안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영역으로부터 출발할 수 있을 것이다.⁶⁰⁾

60) 동북아를 중심으로 진행중인 비정부간 대화로는 금년으로 창설 6년째인 「Asia-Pacific Roundtable」과 「Asia-Pacific Roundtable」에 의해 금년 6월 구성된 Council

그러나 동북아라는 小地域을 중심으로 별도의 제도적인 틀 (institutional framework)을 새롭게 마련할 경우 정부단위의 참여를 통해 일단 참여국 정부대표들간에 비정치적인 이슈들에 대한 합의를 이룰 수 있고 非在來式 威脅에 관한 현안들을 예상외로 빨리 해결할 수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장점을 지적할 수 있다.

현재 샌디에고에서 출발한 동북아 6개국간의 「동북아협력회의」는 定例的인 대화수준의 접촉을 바탕으로 보다 공식적인 정부간의 접촉으로 확대·발전시킬 수 있도록 점진적이고 장기적인 계획이 필요할 것이다. 이러한 대화가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이며 따라서 制度化보다는 機能的 면에서 실질적인 협력의 경험을 축적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일 것이다.

또한 제도화가 이루어진 이후 CSCE내의 안보협력포럼(FSC: Forum for Security Cooperation 이하 FSC로 표기)과 같이 군비 통제 문제만을 전문적으로 다룰 새로운 하부기구의 창설도 검토해 보아야 할 것이다.⁶¹⁾ 최근 CSCE 참가국들은 재래식무기 감축협상과 신뢰안보구축조치의 창안을 위해 FSC를 창설하고

for Security Cooperation in the Asia-Pacific」(CSCAP) 등이 있으며 제도화의 표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또 하나의 대표적인 비정부간대화의 예로는 금년 3월로 종료된 캐나다의 「북태평양안보대화」(NPCSD)로 지난 3년간의 대화 모색과정에서 많은 교훈과 시사점을 주었다.

61) Victor-Yves Ghehali, "The CSCE Forum for Security Cooperation: the opening gambits," *NATO Review* Vol. 41, No. 3(June 1993), pp. 23~27.

그 1차회의를 비엔나에서 개최한 바 있다. FSC의 주요 목적은 유럽안보 및 안정강화를 위한 구체적 조치에 대한 협상, 기존상설기구하에서의 신뢰구축 및 군축에 관련된 제의무의 조화, 군사활동의 透明成 제고를 위한 새로운 안정화 조치에 관한 협상 등에 있으며 이는 동북아지역의 안보협력 실현에 필요한 개념 및 모델을 제시해 주고 있다.

3. 發展 展望

동북아에서 다자간 안보대화가 구성된다고 해도 이러한 대화가 유럽식 안보협력회의 수준으로 급속히 발전되기를 기대하기란 쉽지 않다. 최근 북한의 핵문제로 야기된 남북한관계의 교착상태, 중국과 일본의 향후 영향력 확보경쟁에 따른 대립관계, 러시아와 일본의 북방도서와 경제원조를 둘러싼 불편한 관계, 미·일간의 무역마찰과 재정적자해소에 대한 의견차이, 중·미간 인권문제와 미사일수출 문제로 인한 마찰 등 동북아 6개국은 다자간 안보협력을 추진함에 있어 양자간 관계에 많은 긴장요인을 갖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내국가들은 미국의 안보역할 감소추세, 일본 및 중국의 군사력 경쟁, 러시아 및 중국의 첨단무기 판매 경쟁, 일본의 군사·정치적 역할증대 및 북한의 핵무기 개발 등으로 파생되는 제문제를 다루기 위해서는 동북아를 중심으로 하는 새로운 다자간 안보협력체를 구성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 대체로 동감하고 있다. 특히 한국과 미국은 동북아안보대화의

창설을 통해 양자관계 위주의 동북아 안보구조가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한 補完的 機能을 수행토록 하는 것이 동북아 안정에 유리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있다.

이와 관련, 일본 및 러시아는 동북아라는 小地域中心의 새로운 多者間 安保對話의 개설에 지지의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특히 일본은 아세안과의 협력을 통해 새로운 안보역할을 맡기위해 주도적인 입장을 견지해 나가면서도 동북아라는 특수한 구조에서 미국의 지도적 역할을 인정하고 계속 미국의 주도적 역할을 보조할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의제의 선택에 있어서 여전히 소극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으나 안보대화자체를 거부하지는 않고 있다. 중국은 전통적으로 동남아국가들이 갖고 있는 자국에 대한 의구심을 잠재우기 위하여 아세안이 추구하고 있는 다자간 안보협력 논의를 점차 긍정적으로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중국이 동북아의 小地域安保對話에 참여해서 얻을 수 있는 實益이 廣域的 차원의 「아세안 지역포럼」만큼 명확하지 않다는 점이 문제이다. 다만 일본의 역할에 대한 우려를 갖고 있는 중국으로서는 이 지역의 정치, 경제, 군사문제에 미국이 관여해야 한다는 입장에 반대치 않을 것으로 기대되는 것이다. 또한 다자간 안보대화가 북한을 서방세계와 연결시킬 수 있는 계기를 보장해 준다면 중국으로서도 대화개설자체에 반대할 이유가 없다. 다만 군비통제나 신뢰구축조치 등 구체적인 안보협력체로의 발전안이 제시되고, 이에 북한이 반대하는 경우 중국이 쉽사리 움

직이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현재로서는 북한이 대화자체를 거부하지 않고 있어 多者間 대화를 출범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고무적이다. 그러나 북한이 다자간 안보대화의 참여에서 단순히 배제되지 않겠다는 소극적 태도로부터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전환하여 동북아안보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인지는 불투명한 상태이다.

「동북아협력회의」 본회의가 예정대로 10월에 열린다면 북한까지 포함하는 다자간대화가 공식 출범한다는 점에서 우선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그러나 역내국가간에 기본적인 信賴構築조차 이루어지지 않은 현실을 감안할 때 安保對話가 군비통제를 비롯한 동북아가 직면한 많은 안보문제들을 다룰 수 있는 진정한 의미의 安保協力體로 발전될 수 있을 것인지를 예측하기에는 시기상조이다. 즉, 단계적인 일정표(Road Map)나 장기 발전계획이 없이 단순히 형식상 대화의 출범과 유지정도로 그 목표와 기능을 미리부터 제한시킨다면 안보대화는 북한이나 중국의 政治宣傳을 위한 場으로 전락하기 쉽다는 점도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第 V 章 東北亞 安保協力體 構成과 南北韓關係

1. 安保協力體 構成이 南北韓關係에 미치는 影響

만약 북한이 다자간대화라는 틀을 남북대화를 회피하는 수단으로 활용하거나 政治宣傳을 일삼는다면 불신을 조장시켜줄 뿐 남북관계의 개선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이와같은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남북 양국이 다자간 안보대화를 활용하여 신뢰를 쌓으면 이는 남북관계개선에 긍정적인 측면으로 작용할 것이다. 이러한 경우 다자간대화에 대한 期待水準을 낮추고 남북양자간의 대화 채널을 확보해 놓는다는 점에 그 의의를 둘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한국정부는 휴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시키는 문제에 있어서도 효과를 볼 수가 있다. 즉 남북간의 합의를 바탕으로 주변4강이 多者間 대화의 틀속에서 평화체제를 보장할 수 있다면 다자간 협력이 남북한평화체제 구축에 공헌할 수 있을 것이다. 북한 역시 이러한 대화의 장을 통해 북·미수교나 북·일수교에 접근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는 점에서 다자간대화의 참여에 대한 매력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2. 北韓의 豫想態度 및 對應策

가. 北韓의 豫想態度

북한을 대화에 참여시킴으로서 남북한간에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들을 다자간의 틀속에서 해결해 보자는 의도가 다자간 안보대화를 추진하는 가장 중요한 목표중의 하나이다. 그러나 이러한 구상이 장기적인 목표로 추구하기에는 매우 바람직스러운 측면이 있는 반면 실제로 실천하는 과정에서 많은 난관에 봉착할 수 있는 것이다.

북한이 최근 샌디에고 준비회의에서 보여준 것처럼 향후 戰術的 측면을 강조하며 북·미간의 관계개선과 다자간협상의 틀만을 고집하면서 남북양자간의 접촉을 고의적으로 지연시킨다거나 한·미방위조약의 폐기와 미군철수문제를 들고 나올 가능성이 높다. 또한 다자간 안보대화를 위한 신뢰구축조치를 빌미로 비현실적인 군비감축과 비핵지대화의 즉각적인 실현을 주장할 때 한국정부는 국내적으로 다자간 안보대화 추진정책의 正當性(rationale)에 대한 심각한 비판에 직면할 가능성이 있다. 즉 동북아 6개국은 다자간안보협력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또 실제로 안보대화를 출범시키는 데 있어서도 배제되는 것을 원치 않는 것이다. 그러나 중국이나 북한의 경우 자국의 政權安保(regime security)에 대한 위협을 초래하는 선에서까지 협력안보를 도모하려 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으며, 북한은 안보대화의 참여여부를 북·미관계개선훈으로 이용할 수도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다자간 안보대화는 출발부터 매우 불안하게 운영될 수 있으며 결코 초보적이며 비정치적인 대화수준으로부터 탈피하기 어려울 가능성이 있다.

나. 북한이 參與를 拒否할 境遇

북한이 안보대화의 참여를 거부할 경우, 특히 초기에 참가했다가 번복할 경우에 동북아안보대화의 효과는 그만큼 반감될 수 밖에 없을 것이고 한·미협조아래 이루어진 대화체제의 지속적인 발전에도 한계를 보이게 될 것이다.

북한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안은 북한의 의구심을 근원적으로 없애주고 실질적으로 북한이 대화 내지는 협력체, 또는 이와 관련된 레짐에 참여함으로써 얻는 실질적인 소득이 참가하지 않는 것 보다 훨씬 많다는 확신을 주는 것이다. 따라서 한국정부가 취할 수 있는 우선적인 역할은 동북아지역 안보의 다자간 해결을 전략적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북한에게 한국정부와의 협조가 없이는 결코 북한이 필요로 하는 미·일과의 관계개선이나 경제적인 혜택을 구할 수 없음을 인식시켜주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압력과 채찍만으로는 북한을 다자간 틀속에 참여시켜 협력의 同伴者로 만들기 어렵다. 즉 북한의 參與動機를 誘發하기 위한 구체적인 대안제시가 필요하다.

북한의 참여를 유발시키기 위해서는 결국 북한의 핵개발이나 다량살상무기개발 및 수출포기에 대한 구체적인 補償을 시도하는 방안이(compensation mechanism) 연구되어야 한다. 최근 이스라엘이 노동1호의 對중동수출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북경접촉을 통해 금광채굴 및 외교관계수립 등 구체적인 보상방안을 제기한 바가 있고, 미국 역시 제네바회담에서 북한핵시설을 경수로로 전환하는 문제를 의제로 다룬 경험이 있다. 또한 경제난에

직면한 북한도 전환(conversion)과정의 필요성을 인정, 부분적이거나 중국이나 러시아처럼 군수품공장에서 생필품을 생산하기 시작했다고 한다. 더욱이 북한의 식량사정악화는 북한으로 하여금 외국으로부터의 도움에 무관심할 수 없게 만들고 있어 경제원조와 무기생산(핵 및 재래식)의 전환을 연계시키는 보상정책의 성공 가능성은 높다고 볼 수 있다.

물론 북한에 대한 보상을 제공한다는 것은 자칫 범법자에 대한 지나친 양보라는 차원에서 정서상 받아들여지기 힘든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개념 그대로의 협력안보(Cooperative Security)를 성사시키기 위해서는 대안개발에 있어서도 발상의 전환이 요구되고 있다. 즉 북한의 악화된 경제사정에 직접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구체적인 청사진을 제시함으로써 북한의 핵개발과 미사일수출의 포기를 유도할 수 있다면, 북한이 핵을 포기한후 경험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접근은 기존의 대북정책 범주에서 크게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고 본다.

물론 안보대화를 개설하려는 현 상황에서 다자간 안보협력이 실제로 안보문제에 있어서 성급한 성과를 거두기를 기대하기에는 매우 회의적이다. 그러나 만약 북한의 핵위협이나 미사일 수출 및 실전배치로 인해 위협받는 여러국가들이 안보대화채널을 개설하고 또 군사비규모의 감축과 군수산업 내지 군사시설의 전환을 담보로 북한에 경제원조를 제공할 수 있는 자금을 확보하고 지원한다면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나오게 만들 충분한 명분과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효과적인 방안이라 여겨지며,

이는 장기적으로 동북아 지역내 신뢰구축증진의 효과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대안이 될 것이다. 북한 역시 이를 거부할 명분을 찾기 어려울 것이다. 한국은 북한의 요구에 대한 대응능력이 부족할 경우를 대비해서 미·일 등이 참여하는 다자간틀을 활용하는 방안이 효과적일 수 있다. 그러나 북한이 이러한 대안을 거부하고 불참할 경우 북한을 제외한 주변 5개국간의 대화를 지속함으로써 북한에 대한 국제적인 압력을 증대시키는 것도 채찍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궁극적으로 북한의 참여를 자발적으로 誘導하기 위해서는 당근과 채찍을 적절히 사용해야 하며 대화의 참여가 북한의 생존에도 유익하다는 것을 인식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비록 당근을 제공하여 북한이 변한 예는 없다고 할지라도 구체적으로 북한이 얻을 수 있는 사항에 관한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제시해 주는 것은 북한의 정책결정자들이 합리적인 선택을 취할 수 있는 폭을 넓혀준다는 점에서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물론 한국이 제공할 수 있는 「당근」은 철저한 사찰과 검증을 바탕으로 결정된다고 볼 때 방안자체에 대해 지나치게 반대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 즉 공동안보(common security) 내지 협력안보(cooperative security)는 共同의 敵이 없는 상황에서 모두가 승자가 될 경우에만 현실적으로 성립가능하며 또한 운영 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북한에 대한 실질적인 안보이익을 제공함으로써 오히려 북한의 합리적인 변화와 개방을 앞당길 수 있을 것이며 다자간 안보대화를 진정한 의미의 협력체수준

으로까지 발전시킬 수 있을 것이다.

3. 韓國의 對應方案

가. 主要懸案과 對應策

(1) 핵문제

「동북아협력회의」 구성문제는 미래지향적인 시도로 추진되고 있으며 따라서 보다 거시적인 차원에서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동북아안보협력의 진전여부는 불가피하게 핵문제의 해결속도와 밀접한 관계를 갖게 된다. 만약 핵문제가 풀리기전에 대화가 성립되고 접촉이 진행될 경우 비정치·비군사적인 분야에 대한 북한의 성의 있는 자세여부와 관련없이 한국정부로서는 실질적으로 「당근」을 제공하기 어려울 것이다. 만약 한국이 북한의 핵문제해결을 촉구하기 위해 압력을 가한다면 북한은 다자간틀로부터 벗어나고자 할 것이다.

첫째, 핵문제가 순조롭게 해결될 경우, 북한은 한국정부로부터 경제협력의 허용은 물론 미국과 일본으로부터 많은 협조를 얻어낼 수 있을 것이다. 핵의 평화적 이용에 대한 방안으로 제시된 경수로 지원문제도 다자간틀안에서 논의될 수 있을 것이고 환경, 마약문제 등 다양한 의제를 논의하는 가운데 인적교류가 증가될 것이다. 북한은 국제적인 고립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고 體制維持를 위한 국제적 보장까지도 확보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게 될 것이다. 또한 북한은 자국의 경제난 극복에 필수적

인 기술지원, 경제지원 및 교역증대문제에 관해서도 역내국가들과 논의할 수 있을 것이다. 1992년 북한·미국간의 교역규모가 47만5천달러로 1991년의 10만달러보다는 크게 늘어났으나 북·미간 교역은 1950년에 제정된 미국의 對敵性國 무역법에 묶여 광산용 기계 등 일부 인도적 차원의 물품교류를 제외하고는 이렇다할 진전이 없는 편이다. 따라서 핵문제가 해결된다면 북·미 교역은 급속히 진전될 것이며 북·일 관계에서도 상응하는 진전이 예상된다.

그러나 핵문제 선결을 대화발전의 前提條件으로 간주하기 보다는 다자간 안보대화를 통하여 핵문제 해결을 앞당길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즉 이러한 대화가 북한에게 제공할 수 있는 實益을 보다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이를 보장할 때 북한의 핵카드는 더 이상 카드로서의 活用價值가 없어질 것이며 다자간협력의 틀안에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임을 스스로 깨달을 수 있게 될 것이다. 따라서 다자간 안보대화는 남북한이 주변열강들의 지원하에 협력을 추구할 수 있는 媒介體 役割을 하게 될 것이며 남북관계 개선의 속도를 촉진시키게 될 것이다. 다자간협력을 통해 신뢰구축을 위한 기반조성이 점진적으로 이루어진다면 이해당사자인 남북한과 미국, 중국 등이 참여하여, 휴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시키기 위한 실무적인 논의를 시작할 수 있을 것이고 국제사회에서 진정한 남북협력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1993년 10월 샌디에고에서 개최예정인 6개국간의 안보대화는

현재 핵문제와는 별개로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대화에 참여하는 한국과 주변4강은 북한의 핵문제 선결이 안보대화의 발전에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된다는 점을 부각시켜야 할 것이다. 결국 북한이 대결적인 자세로부터 탈피하여 개방화로 가기 위해서는 이러한 다자간의 틀을 활용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선택이라는 점을 인식하도록 분위기를 조성해야 할 것이다. 즉 다자간틀 안에서의 접촉이 정례화되면 곧 상호간의 실체를 인정하는 의미가 있는 만큼 북한으로서는 다자간대화의 참여에 소극적일 필요가 없을 것이다. 따라서 한국정부는 미국과의 긴밀한 협조 아래 미·북한 회담과 남북회담을 통해 북한이 핵을 포기하도록 설득해야 하며 다자간대화채널을 통해 북한도 동북아 지역안보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을 인식시켜야 할 것이다.

(2) 주한미군 철수문제

북한이 戰術的 측면에서 주한미군철수문제나 한·미방위조약 폐기문제를 들고 나올 경우, 동북아 다자간 안보대화는 기존의 양자간 동맹구조를 補完하는 성격임을 강조하고 다자간 안보에서 다룰 수 있는 사항이 아님을 주지시켜야 할 것이다.

(3) 휴전체제의 평화체제로의 전환문제

평화체제를 위한 전환문제는 양자간의 협상에서 다루어야 한다는 것이 한국정부의 기본입장이나 평화체제의 보장만큼은 다자간의 틀에서 가장 효과적으로 다룰 수 있을 것이다. 미·일·중

·리가 공동성명 형식으로 입장을 발표할 수도 있을 것이고, 이와 관련 남북간의 조속한 평화조약 체결에 대한 촉구를 권장할 수 있다.

나. 段階別 發展方向

우선 한국정부는 동북아 6개국간의 안보대화를 개설한다는 점에 큰 의미를 두지 않을 수 없으며 따라서 비정치적인 대화로부터 출발시킨다는 입장을 분명히 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현 단계로서는 정치 및 군사문제를 병행하는 문제는 논외이다. 그러나 현재 구상중인 동북아안보대화가 신뢰구축조치나 군비통제조치들을 포함시키는 실질적인 안보협력체 수준으로 발전시켜야 한다는 점에서는 사전준비작업이 필요할 것이다.

현재 북한은 샌디에고에서 열린 동북아안보대화를 위한 「동북아협력회의」 예비회담에 참가했고 금년 10월 같은장소에서 예정된 본회의에도 참석할 뜻을 밝히고 있지만 북한의 핵문제에 대한 기존태도를 근거로 볼 때 군비통제의 문제가 본궤도에 들어설 경우, 북한이 다자간협상에 반대하거나 탈퇴할 가능성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를 대비하여, 중장기적으로 북한을 실질적인 참여국으로 정착시킬 수 있는 誘導方案을 다음 4가지 단계로 구상해 볼 수 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다자간 안보협력이 북한을 포함한 공동안보 즉 협력을 통해 참여국 모두가 안보의 증진을 기할 수 있도록 모색되었다는 점을 북한이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분위기

를 조성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다. 제1단계 및 제2단계는 북한의 의구심을 없애기 위한 기본적인 신뢰구축을 위한 준비단계이며 가급적 빠른속도로 추진해야 한다.

(1) 제1단계

안보대화 개설을 위한 준비단계로 한·미·일 공조체제 및 한·중, 한·러 쌍무협조체제 확립이 선결되어야 한다. 의제는 비정치·비군사적인 영역에서 출발하되 대화를 公式化하고 定例化하는데 의미를 둔다. 또한 미북한, 일·북한관계 개선의 속도를 북한의 다자간대화에서의 기여도와 연관시킴으로써 북의 성의 있는 자세를 촉구한다.

(2) 제2단계

안보대화에서 논의해 온 비정치·비군사분야의 영역은 계속 논의·해결한다. 이단계에서는 비공개리에 안보시각과 정보를 교환하고 우발적인 충돌방지, 군사 투명성제고, 해·공상의 사건 방지등 신뢰구축조치를 논의한다. 또한 군비통제 및 전환(Conversion)레짐을 설치하기 위한 위원회를 구성하고 대화의 수준을 협력체로 발전시키기 위한 준비작업을 한다. 협력체의 하부구조에 우선적으로 한반도 비핵화 및 미사일 통제레짐, 북한의 핵 및 미사일 체제에 대한 전환 등 보다 직접적인 군비통제문제를 다룰 수 있는 위원회를 둘 수 있을 것이며 동시에 사찰규정과 절차를 확정짓고 전환자금의 순차적 확보계획을 마련

하여 시행에 옮긴다.

(3) 제3단계

2단계에서의 준비과정을 토대로 3단계에서는 안보대화를 안보협력체 수준으로 격상시키며 남북간 군비축소와 더불어 지역적 차원에서의 군비통제를 주도해 나아간다. 격상된 안보협력체에서는 북한의 참여와 그에 대한 보상 조건을 공식적으로 제기하고, 북한이 핵 및 미사일 해체작업을 결정할 경우 필요한 전환자금과 기술을 지원한다.

(4) 제4단계

철저하고 공정한 검증을 실시하며 안보협력체 참가국간의 투명성을 최대한 보장한다. 3단계에서 부분적으로 시행될 한반도 군축을 계기로 신뢰구축을 쌓아 나아가며 참여국간에 다방면으로 협력을 확산시켜 나아간다. 또한 남북간의 신뢰구축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면 휴전체제의 평화체제로의 전환에 대한 협상을 시작할 수 있을 것이고 주변국들은 다자간틀속에서 평화체제를 보장하는데 합의할 수 있을 것이다.

第Ⅵ章 結 論：韓國의 政策的 考慮事項

한국이 동북아에서 다자간 안보대화를 개설하려고 노력하는 가장 중요한 목표는 북한의 開放과 改革을 誘導하고 아·태지역의 협력에 북한을 동참시키고자 하는 것이다. 한국은 다자간의 틀을 활용 북한이 외부세계와 계속적인 접촉을 유지케 함으로써 핵문제와 같은 분쟁의 소지를 사전에 방지하고 신뢰구축조치들을 통해 안보증진과 평화정착을 모색하려 하고 있다. 만약 한국의 정책결정자들이 다자간 안보대화를 추구하는 上記의 목표에 동의한다면 구체적인 방법론을 다루기에 앞서 선결해야 될 가장 중요한 문제가 바로 북한을 협력안보(cooperative security)의 진정한 대화파트너로 간주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하는 점이다. 결국 북한을 유도할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이란 북한이 다자간 안보대화를 통해 실질적인 당근을 얻을 수 있는 반면 戰術的 측면에서의 형식적인 참여는 결국 미·북관계 및 미·일관계의 개선을 더욱 불가능하게 만들 수 밖에 없다는 점을 확실하게 인식시키는 것이다.

또한 안보대화를 출범시킴에 있어서 한국정부는 한반도문제의 國際化에 따른 영향력 약화 가능성이나 북한의 선전 및 선동에 이용당할 여지에 대한 지나친 우려를 두려워 할 필요가 없다고 본다. 오히려 다자간 협상틀을 이용하여 북한이 참여국들과 관계개선을 시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또 주선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정부는 동북아 안보협

력체가 안보문제를 얼마나 효과적으로 다룰 수 있겠는가 하는 實效性의 次元에서 접근하기 보다는 북한에게 장래 회원국으로서의 역할과 신뢰회복조치들을 성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교육시키고 적응시키는 訓練과 對話의 場으로 활용한다는데 우선적인 목표를 두어야 할 것이다.

다음은 한국정부가 고려해야 할 사항들이다.

첫째, 다자간 안보대화를 통해 냉전종식후의 동북아질서를 보다 적은 비용으로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는 장점은 이미 지적인 바 있으나 안보의 기본축은 양자관계에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한국이 동북아 6개국 안보협의회의를 통해 기대했던 목표들을 성사시키기 위해서는 대미관계는 물론 대중국, 대러시아, 대일본간의 양자간 관계의 증진과 한·미, 한·일 안보협조체제의 강화가 선행되어야 한다. 즉 다자간 대화는 반드시 다자간의 협상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양자관계를 통해서 공통시각 및 이익 등을 도모한다면 그 결과 자연스럽게 발전할 수 있는 것이다. 최근 일본은 미국의 클린턴 정부 출범이후 경제문제에 편중되고 있는 미·일관계를 안보협력 중심으로 전환하기 위해 미국과 새로운 안보협의체를 만들기로 합의했고, 중국과의 안보협의를 정례화하고 군사능력과 정책의도를 상호 설명함으로써 양국간 신뢰를 증진해 나갈 방침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러한 일본의 정책추진 방향은 우리에게도 많은 시사점을 주고 있다. 따라서 현재 일본이 시작한 바와 같이 한국도 중국 및 러시아와 안보협의를 성사시킬 필요

가 있다. 특히 한·중 군사정보교환 및 교류가 시도될 필요가 있다.

둘째, 현정부의 통일방안단계에 따라 정책을 추진한다면, 남북연합의 단계에 도달하기전 현행 휴전체제의 평화체제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이와 관련, 다자간 안보대화의 채널속에서 북한의 일본 및 미국과의 관계개선속도와 평화체제의 전환문제를 연계시키는 구체적인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만약 북한이 다자간 안보대화에 참가할 경우 남북 양자간에 다룰 수 있는 문제와 다자간 틀 속에서 협의할 문제를 구분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따를 수 있기 때문에 철저한 사전준비가 필요할 것이다. 또한 북한의 핵문제가 채 정리되기전에 다자간 안보대화가 진행되고 북한이 참여할 경우 한국은 비정치적인 수준에서의 대화를 어느 선까지 진전시킬 것인지, 북·미 또는 북·일간의 접촉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명확한 입장정리가 필요할 것이다.

넷째, 한국의 정책결정자들은 다자간 안보대화를 통해 우리가 추구하는 것이 과연 분쟁요인을 사전에 해소하는 豫防外交(preventive diplomacy)의 수준에서 머물 것인지 아니면 보다 실질적인 안보협력을 통해 신뢰구축조치들과 평화공존방안들을 논의하고 紛爭解決(conflict resolution)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할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정리해야 할 것이다.

다섯째, 다자간 안보대화를 mini-CSCE형의 안보협력체 수준으로 발전시키려면 군비통제 및 신뢰구축조치들을 단계적으로

적용시킬 수 있도록 미국은 물론, 러시아, 중국 및 일본의 핵정책이나 미사일 수출정책, 각국의 재래식 무기수출정책, 그리고 전략무기체계개발에 대한 우리정부의 명확한 입장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

여섯째, 북한이 다자간 안보대화를 전술적으로 활용할 가능성에 대비해야 할 필요가 있으며 궁극적으로 다자간 안보협력이 휴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시키는 문제와 통일환경조성을 위한 대북한 유도방안을 개발해야 한다는 점에서 관련부서와의 긴밀한 업무협조가 요망된다. 따라서, 각부서의 실무자들로 구성된 연구팀과 조정위원회의 설치가 필요하다.

결론적으로, 북한의 개방과 개혁을 유도함에 있어서 한국정책결정자들이 갖는 과제는 남북 당사자간의 채널과 전통적 우방인 미·일과의 양자 내지 삼자협력 채널, 그리고 다자간 안보 대화의 세가지 채널을 전략적으로 어떻게 調和시키면서 국가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데 있다.

參 考 文 獻

1. 단행본

김달중 편. 「소련의 아세아 정책과 한반도」. 서울: 법문사, 1987.

통일원. 「통일백서」. 서울: 통일원, 1991.

황병무. 「新中國軍事論」. 서울: 법문사, 1992.

Carter, Ashton B., Perry, William J., and Steinbrunner, John D.
A New Concept of Cooperative Security. Washington, D.
 C.: The Brookings Institution, 1992.

Bennett, A. Leroy. *International Organizations*. Englewood Cliffs,
 N.J.: Prentice-Hall, Inc., 1980.

David Dewitt and Paul Evans ed. *Conference Report: The Agenda
 for Cooperative Security in the North Pacific*. New York
 University, Toronto, 1993.

2. 논문

한승주. “아세안과 동아시아의 지역안보.” 「동남아시아연구」. 창
 간호.

홍규덕. “탈냉전과 동아시아 군비확장.” 「평화연구」. 제2호,
 1992.

- Ahn, Byung-joon. "Korea, the U.S. and Japan: A Tripartite Partnership for Security, Interdependence and Unification." Paper presented at the 2nd RINU-APA-CSIS Joint Workshop. Tokyo, May 21~22 1993.
- Burrell, Steve. "Security Dominates ASEAN Concerns." *Financial Review*. July 27, 1992.
- Endicott, John. "International Conflict and Collective Security: Limitations and Prospects." Paper prepared for International Conference on "The New World Order and Korea: Challenges and Prospects Towards the Year 2000" by the Korean Association of International Studies. August 26, 1993.
- Evans, Gareth. "The Asia Pacific and Global Change." Address to the Trilateral Commission. Tokyo. April 20, 1991.
- Ghebali, Victor-Yves. "The CSCE Forum for Security Cooperation: the opening gambits." *NATO Review*. Vol. 41, No. 3. June, 1993.
- Henderson, Stewart. "Canada and Asia-Pacific Security: the NorthPacific Security Dialogue: Recent Trends." *North Pacific Cooperative Security Dialogue*. New York University, Toronto, 1992.
- Ina, Hisayoshi. "A New Multilateral Approach for the Pacific: Beyond the Bilateral Security Network." The Johns

- Hopkins Foreign Policy Institute Papers, 1993.
- Kim, Kook-Jin. "Approach to Cooperative Security in Northeast Asia: Korea's Perspective." Paper presented at the International Symposium on "Asia in the 21st Century" Kon-Kuk University. May 11~12, 1993.
- Mack, Andrew. "Security Cooperation in Northeast Asia: Problems and Prospects." *Journal of Northeast Asian Studies*. Vol. XI, No. 2. Summer, 1992.
- Mark M. Lowenthal. "Preventive Diplomacy: Prospects and Issues." CRS Report for Congress. March 25, 1993.
- Nolan, Janne E. "The Global Arms Market after the Gulf War: Prospects for Control." *The Washington Quarterly*. Summer, 1991.
- Richardson, Michael. "Clinton, With Eye on Trade, Calls for a Pacific Rim Summit." *International Herald Tribune*. July 9, 1993.
- . "Asia Seeks a Risk in Tokyo-Beijing Military Rivalry." *International Herald Tribune*. October 20, 1992.
- Harding, Harry. "Organizing Asia." Paper prepared for the Conference on "Asia in Transition: Toward a New Regional Order." The East-West Center Honolulu, Hawaii. January 4~7, 1993.
- Hawke, R. J. "Australia's Security in Asia." The Asia-Australia

- Institute. Sydney. May 24, 1991.
- Johnos, Chalmers. "Rethinking Asia." *The National Interest* No. 3. Summer, 1993.
- Kimura, Hiroshi. "Soviet Focus on the Pacific." *Problems of Communism*. May/June, 1987.
- Li, Luye. "Current Situation in Northeast Asia." *Beijing Review*. August 19~25, 1991.
- McDougall, Barbara. "Canada and the Pacific Century." An adress to the joint luncheon of the Vancouver Board of Trade and the Asia-Pacific Foundation. Vancouver, British Columbia. February 19, 1993.
- Modelski, George. "SEATO" in Francis A. Beer, ed. *Alliances: Latent War Communities in the Contemporary World*. New York: Holt, Reinhart and Winston, 1970.
- Richardson. "In Asia-Pacific, a New Push for Security Accords." *International Herald Tribune*. March 30, 1993.
- Wang Jisi. "East Asia: Prospects for Cooperation." *Beijing Review*. July 19~25, 1993.
- Xu, Xin. "Changing Chinese Security perceptions." NPCSD Working Paper. Number 27. New York University, Toronto, 1993.
- "Asia's Arms Race." *The Economist*. February 20, 1993.
- 張雅君. "90年代中共的亞太戰略." 「中國大陸研究」. 第 35 卷, 第

11期. 1992. 11.

3. 기타

김영삼. “태평양 시대와 한국의 「신외교」.” 제 26차 태평양경제
협의회(PBEC) 총회 연설문. 1993. 5. 24.

노태우 대통령의 UN총회연설. “한반도에 화해와 통일을 여는
길.” 1991. 10. 18. 북방정책연구소. “고르바초프의 크라
스노야르스크 연설문.” 1988. 11.

한승주 외무장관 연설문. “한국 신외교의 기초.”(Fundamental's
of Korea's New Diplomacy) 서울: 외교협회, 1993. 5.
31.

Lord, Winston. “A New Pacific Community Ten Goals For
American Policy.” Opening Statement at Confirmation
Hearings for Ambassador Winston Lord Assistant
Secretary of State—Designate Bureau of East Asian and
Pacific Affairs, March 31, 1993.

Satoh, Yukio. “Asian Pacific Process for Stability and Security.”
the 5th Asia-Pacific Roundtable: Confidence building
and Conflict Reduction in the Pacific. Kuala Lumpur.
June 10~14, 1991.

Solomon, Richard. “Asian Security in the 1990s: Integration in
Economics, Diversity in Defense.” An Address to the

University of California, at San Diego Graduate School
of International Relations and Pacific Studies, October
30, 1990.

「國民日報」.

「東亞日報」.

「世界日報」.

「朝鮮日報」.

「中央日報」.

「人民日報」.

「한겨레신문」.

「한국일보」.

International Herald Tribune.

The Korea Herald.

Novosti Press.

「大公報」(香港).

● 發刊資料目錄案內 ●

〈세미나시리즈〉

- 91-01 轉換期の 東北亞 秩序와 南北韓 關係
- 91-02 岐路에 선 北韓의 經濟社會: 實相과 展望
- 91-03 北韓體制的 變化: 現況과 展望
- 92-01 南北和解·協力時代, 우리의 座標와 課題
- 92-02 北韓의 權力構造와 金日成 이후 政策方向 전망
- 92-03 北韓의 核問題와 南北韓 關係
- 92-04 韓半島 周邊4國의 對北韓政策
- 92-05 轉換期の 南北韓關係: 現況과 展望
- 93-01 統一理念으로서의 民族主義
- 93-02 北韓 核問題: 展望과 課題

〈研究報告書〉

- 91-01 第2次大戰後 新生國家의 聯邦制度 運營事例
- 91-02 北韓聯邦制案의 分析 및 評價
- 91-03 美國聯邦制 研究: 歷史的 發展過程을 中心으로
- 91-08 韓半島 非核地帶化 主張에 대한 對應方向
- 91-09 東西獨 事例를 통해 본 南北韓關係 改善方案: 정상회담과
기본조약체결 사례 중심
- 91-10 國際的 平和保障 事例研究
- 91-11 在野統一案 研究

- 91-12 蘇聯의 東北亞政策 變化와 東北亞秩序 改編: 1990年代 東北亞秩序 豫測 (I)
- 91-13 北韓體制的 實相과 變化展望
- 91-14 「한민족공동체」具體化方案 研究: 社會·文化·經濟 交流·協力 中心
- 92-01 統一獨逸의 分野別 實態 研究
- 92-02 中國의 改革·開放 現況과 展望: 北韓의 中國式 改革·開放 모델 受容 可能性과 關聯
- 92-03 美國의 對韓半島政策: 韓國安保와 南北韓 統一問題를 중심으로
- 92-04 日本의 國際的 役割增大와 東北亞秩序: 1990年代 東北亞秩序 豫測 (II)
- 92-05 1992年度 統一問題 國民輿論調查 結果
- 92-06 軍備統制 檢證 研究: 理論 및 歷史와 事例를 中心으로
- 92-07 北韓住民의 人性研究
- 92-08 國際社會에서의 南北韓間 協力方案 研究
- 92-09 日本의 對韓半島政策
- 92-10 러시아聯邦의 對韓半島政策
- 92-11 東北亞 經濟協力的 發展方向
- 92-12 統一獨逸의 財政運用 實態研究: 統一關聯 財政政策 中心
- 92-13 南北韓 國力趨勢 比較研究
- 92-14 南北韓 社會·文化共同體 形成方案: 社會 文化的 同質性 增大方案 中心
- 92-15 北韓의 權力엘리트 研究

- 92-16 東北亞 新國際秩序에서의 韓半島 統一基盤 造成方案
- 92-17 南北韓 經濟共同體 形成方案
- 93-01 1993年度 統一問題 國民輿論調查 結果
- 93-02 金日成著作 解題
- 93-03 日本의 對北韓政策
- 93-04 中國의 改革·開放 加速화와 東北亞秩序：1990年代 東北亞秩序 豫測(Ⅳ)
- 93-05 中·臺灣關係의 現況과 發展方向
- 93-06 美國 클린턴 行政府의 東北亞政策과 東北亞秩序 變化
— 1990년대 東北亞秩序 豫測(Ⅲ) —
- 93-07 東北亞地域에서의 多者間 安保協力體 形成展望과 對應策

〈統一情勢分析〉

- 91-01 韓·蘇, 日·蘇 頂上會談 結果 分析：韓半島 周邊情勢 및 南北韓關係에 미칠 영향을 중심으로
- 91-02 고르바초프 權力的 現況과 展望
- 91-03 李鵬 中國總理의 訪北 結果 分析：韓半島 周邊情勢 및 南北韓關係에 미칠 영향을 중심으로
- 91-04 第85次 國際議會聯盟(IPU) 平壤總會 綜合分析
- 91-05 中·蘇 頂上會談 結果 分析
- 91-06 北·日, 北·美關係 變化展望과 對策
- 91-07 北韓의 유엔加入宣言의 影響과 政策變化展望
- 91-08 美國의 東北亞 安保政策 基調와 最近動向
- 91-09 유고슬라비아의 民族葛藤과 聯邦解體 危機

- 91-10 中國의 對韓政策 展望
- 91-11 엘친의 러시아大統領 當選이 蘇聯國內情勢에 미칠 影響
分析
- 91-12 美·蘇의 對 東北亞政策과 東北亞 軍事秩序 再編 可能性
- 91-13 美·蘇 頂上會談의 結果 分析
- 91-14 戰術核 관련 부시 美大統領 宣言이 東北亞 및 韓半島安保
에 미치는 影響
- 92-01 부시 美國大統領의 아시아4個國 巡訪結果 分析: 南·北韓
關係와 관련하여
- 92-02 豆滿江地域開發計劃 發展方向
- 92-03 中國의 改革·開放 深化가 北韓에 미치는 影響
- 92-04 러시아聯邦의 改革과 韓·러關係 展望
- 92-05 東北亞情勢와 統一環境: 1992年 上半期
- 92-06 북방정책 이후 동북아정세와 한반도 통일환경
- 92-07 豆滿江地域開發計劃의 現況과 展望: 開發代案 및 法制度
中心
- 93-01 最近 러시아聯邦의 政局推移: 國民投票 結果를 中心으로
- 93-02 北韓 核問題의 展開過程 分析 및 展望
- 93-03 北韓의 對南動向 分析(1993. 1~6)
- 93-04 「조국통일을 위한 전민족대단결 10대강령」과 北韓의
對南 政策
- 93-05 東北亞 多者間 安保協力體 構成展望과 南北韓關係

〈世界主要事件日誌〉

- 91-01 世界主要事件日誌(1991. 4. 1~1991. 6. 30)
- 91-02 世界主要事件日誌(1991. 7. 1~1991. 9. 30)
- 91-03 世界主要事件日誌(1991. 10. 1~1991. 12. 31)
- 92-01 世界主要事件日誌(1992. 1. 1~1992. 3. 31)
- 92-02 世界主要事件日誌(1992. 4. 1~1992. 6. 30)
- 92-03 世界主要事件日誌(1992. 7. 1~1992. 9. 30)
- 92-04 世界主要事件日誌(1992. 10. 1~1992. 12. 31)
- 93-01 世界主要事件日誌(1993. 1. 1~1993. 3. 31)
- 93-02 世界主要事件日誌(1993. 4. 1~1993. 6. 30)

〈年例情勢報告書〉

- 91 統一環境と 南北韓 關係：1991~1992
- 92 統一環境と 南北韓 關係：1992~1993

〈論 叢〉

統一研究論叢 創刊號(1992. 6)

統一研究論叢 第1卷 2號(1992. 12)

統一研究論叢 第2卷 1號(1993. 7)

THE KOREAN JOURNAL OF NATIONAL UNIFICATION vol. 1
(1992)

〈資 料〉

- 92-01 統一 吳 北韓關聯 研究文獻目錄(國文篇)
- 92-02 統一 吳 北韓關聯 研究文獻目錄(外國語篇)
- 93-01 藏書目錄:單行本 研究報告書
- 93-02 藏書目錄:特殊資料

東北亞地域에서의 多者間 安保協力體
形成展望과 對應策

研究報告書 93-07

發行處 民族統一研究院

編輯人 民族統一研究院 國際研究室

서울 중구 장충동 2가 산 5-19

전화 : 232-9252 , FAX : 232-5341

印刷處 양동문화사 전화 : 272-1767

印刷日 1993년 9 월 일

發行日 1993년 9 월 일
